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목표 연계

2016. 2.



New Urban Agenda: Thematic Areas



Social Cohesion & Equity



Urban Frameworks



Spatial Development



Urban Economy



Urban Ecology & Environment



Urban Housing & Basic Services



(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연구기간 |

2015.7.15.~2015.12.14

연구 및 발행 기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진 |

책임연구위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위원 윤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김시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람후 몽크나름 연세대학교 박사과정/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운드라흐바야르 출몽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객원연구원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목표 연계

2016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 행 일 | 2016.2.

발 행 인 | 조명래

발 행 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록번호 | 제 25100-2013-000010호

(본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1번길 44, 203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전화. 02-706-6179 이메일. kicsd@kicsd.re.kr

홈페이지. www.kicsd.re.kr

ISBN 978-89-960379-3-3 95060(세트)

※ 본 보고서는 종합보고서, 지역보고서, 요약본(국/영문)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본은 종합보고서와 요약본만 발간되며, 지역보고서는 전자문서(PDF) 형태로만 배포합니다. 3종의 보고서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4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LCSD)가 컨소시엄으로 지원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컨소시엄 지역>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도, 충남도, 전북도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화성,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인천남구

발/간/사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는,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등 지속가능발전 국제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20년 동안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해 온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을 주요 3개 국제 이행목표(유엔 SDGs, 유엔 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와 연계하고, 거버넌스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범위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사업과 거버넌스 활동으로 제한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사업의 공식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기획-이행-평가 과정이 체계적인 참여적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 시간적 한계로 2011~2015년 최근 5개년 동안 추진한 실천사업만을 조사범위를 제한하였다.

보고서 내용은 크게 5개 파트로 나뉘지는데, 1) 연구개요, 2) 우리나라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구조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현황 분석 내용, 3) 국제적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과 3개 국제 이행목표들과의 연계 분류, 4)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인적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위원들의 주요그룹 분포 현황과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및 거버넌스 참여도 분석, 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성과를 통합 정리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별도로 24개 지역별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차원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4개 광역 및 기초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구 컨소시엄**으로, 2015.7.15.~2015.12.14.까지 총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광역시/도(7) :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기초시/구(17) :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화성,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인천 남구

한편, 본 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 2개 언어 보고서로 제작**되며, 24개 지역별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다양한 정책운동 촉진을 위해 지역별 통계데이터 자료가 제공된다.

본 연구내용은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의 정책연구보고서인 「(가칭)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별 준비 현황」(2016. 상반기 중 출간 예정)에 삽입될 예정이며,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시 배포될 예정이다.

2015년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2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총회차원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채택되어 '지속가능발전'이 마침내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주류 패러다임이 된 의미있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용은 세계적으로 가히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국가주도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정치적 영향으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많은 세계 사례에 비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주도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시사점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용과 의미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국제 지속가능발전 운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2014년 법률지정단체를 제외한 비정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기구 운영이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다행히 2015년 한 해 동안 공동의 정치적 노력을 통해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항을 넣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거버넌스 조직 운영 기반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이제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동을 추진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때**이다.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주류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의 담론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정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외교부의 해외원조사업 기조는 SDGs로 전환하여 KOICA, 국내 국제개발협력단체들과 함께 SDGs 정책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기치로 내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뿌리 시민사회 역량과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유의미하게 확산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핵심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계속 생산해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책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촉진하는데 작으나마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 준 24개 광역 및 기초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며칠씩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며 24개 지역 120권의 지역 총회자료집과 정부 웹사이트들을 꼼꼼히 훑어 기초 데이터를 정리해준 몽골 유학생 람후 몽크나릉(나라), 운드라흐바야르 촐몽(오기) 객원연구원과 21개 지역보고서를 작성한 김시내 객원연구원 덕분에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었다.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한다.

2016.2.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 발간사 ... i
- ◇ 요약문 ... 01

I. 연구개요 ... 09

II. 기본현황

- 1.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 13
- 2. 조사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여건 ... 19

III.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1. 개관 ... 27
-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이행목표 현황 ... 28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8
 - 2) 유엔 해비타트 新도시의제 ... 29
 - 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 30
 - 4)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 ... 31
 - 5)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별 실천사업 내용 범위 ... 33
- 3.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35
 - 1)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로 본 지역CSD 실천사업의 특징 ... 35
 -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CSD 실천사업 현황 ... 39
 - 3) 유엔해비타트 新도시의제와 지역CSD 실천사업 현황 ... 41
 - 4)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와 지역CSD 실천사업 현황 ... 43
- 4. 종합정리 ... 45

IV. 지역 CSD 거버넌스 역량 현황

- 1. 개관 ... 49
- 2.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인적자원 현황 ... 50
- 3. 지역 CSD 거버넌스 활동성과 ... 52
- 4. 종합정리 ... 60

V. 결론 : 성과와 과제 ... 61

- ※ 부록 | 설문조사지 ... 66
- ※ 별책 | 24개 지역보고서



표/그림
목차

[표 목차]

- <표 2-1> 조사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행정 담당부서 현황
(2015년 기준) ... 18
- <표 2-2> 우리나라 총 인구규모 및 조사지역 인구현황
(2013년 기준) ... 19
- <표 2-3> 인구규모에 따른 OECD 도시 분류와 조사지역
현황 ... 20
- <표 2-4> 전국 및 조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개인소득 현황(2014년 기준) ... 21
- <표 2-5> 전국 및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기준) ... 23
- <표 2-6> 조사지역의 지역CSD/담당부처/지방정부의 2011-2015년 평균 예산 및 비중 현황 ... 25

- <표 3-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8
- <표 3-2>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 ... 29
- <표 3-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 30
- <표 3-4> 50개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 추출 현황 ... 31
- <표 3-5>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별 지역 실천사업 내용 범위 ... 33
- <표 3-6> 분야별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 36
- <표 3-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0
- <표 3-8> 유엔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2
- <표 3-9> 생물다양성 아이치(Ichi) 목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4
- <표 3-10>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45

[그림 목차]

- <그림 2-1>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수립 연도별 현황(2015년 기준) ... 13
-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지원 조례 제정 연도별 현황(2015년 기준) ... 13
- <그림 2-3> 우리나라의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 ... 14
- <그림 2-4>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 16
- <그림 2-5>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기구) 참여 구조 ... 17
- <그림 2-6> 조사지역 행정 담당부서 현황(2015년 기준) ... 18
- <그림 2-7> 조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총소득(GRI) 현황(2014년 기준) ... 22
- <그림 2-8> 조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및 개인소득(PI) 현황(2014년 기준) ... 22
- <그림 2-9> 전국평균 대비 조사지역 지방재정자립도(2014년 기준) ... 24
- <그림 2-10> 조사지역의 지역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 26
- <그림 2-11> 광역시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 26
- <그림 2-12> 광역도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 26
- <그림 2-13> 기초시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 26

<그림 3-1> 경제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	36
<그림 3-2> 사회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	36
<그림 3-3> 환경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	36
<그림 3-4> 거버넌스/이행수단 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	36
<그림 3-5> 광역CSDs 실천사업 키워드 분포현황 ...	37
<그림 3-6> 기초CSDs 실천사업 키워드 분포현황 ...	37
<그림 3-7> 지역CSDs 별 키워드 개수 현황(사업종류 분포) ...	38
<그림 3-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2011-2015 실천사업 현황 ...	39
<그림 3-9> 유엔 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1
<그림 3-10> 신도시의제 6개 분야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1
<그림 3-11>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	43
<그림 4-1> 17개 그룹 기준 2011-2015년 24개 지역CSD 참여 주요그룹 현황 ...	50
<그림 4-2> 유엔 8개 그룹 기준 2011-2015년 24개 지역CSD 참여 주요그룹 현황 ...	50
<그림 4-3> 7개 광역CSD 참여 주요그룹 분포 ...	51
<그림 4-4> 17개 기초CSD 참여 주요그룹 분포 ...	51
<그림 4-5> 24개 지역별 설문응답 현황 ...	52
<그림 4-6> 성별 ...	53
<그림 4-7> 연령 ...	53
<그림 4-8> 학력 ...	53
<그림 4-9> 소속그룹(17개 그룹 분류기준) ...	53
<그림 4-10> 소속그룹(8개 그룹 분류기준) ...	53
<그림 4-11> 의제활동 총 참여기간 ...	54
<그림 4-12> 참여 전 '지속가능발전' 인지 여부 ...	55
<그림 4-13> 참여 전 '거버넌스' 인지 여부 ...	55
<그림 4-14> 참여 전 '지속가능발전' 인지 경로 ...	55
<그림 4-15> 참여 전 '거버넌스' 인지 경로 ...	55
<그림 4-16> '지속가능발전' 이해 정도(5점 만점 기준) ...	56
<그림 4-17> '거버넌스' 이해 정도(5점 만점 기준) ...	56
<그림 4-18> 지역CSD 참여 후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인식 변화 정도(5점 만점 기준) ...	57
<그림 4-19> 지역 CSD 참여 전/후 거버넌스 경험 변화 유무 ...	58
<그림 4-20> 지역 CSD 참여 전/후 거버넌스 활동 형태 변화 현황 ...	58
<그림 4-21>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단위 ...	59
<그림 4-22> 지역 CSD 거버넌스 단계별 참여 정도(5점 만점 기준) ...	59

요약문

I. 연구개요

-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는,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등 지속가능발전 국제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20년 동안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해 온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을 주요 국제 이행목표(유엔 SDGs, 유엔 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와 연계하고, 거버넌스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
- 2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2015년까지 진행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들을 3개 국제 이행목표들과 연계하여 분류 후, 사업의 특성 분석.
- 또한, 24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LCSD: Local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참여 위원들의 소속그룹 분포 현황과 참여위원 설문조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및 거버넌스 참여정도 현황 분석.
- 본 연구는 24개 광역 및 기초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 컨소시엄으로, 2015.7.15.~2015.12.14.까지 총 5개월 동안 진행.
 - 광역시/도 총 7곳 :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기초시/구 총 17곳 :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화성,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인천 남구

II. 기본현황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제도화
 -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조적 연계 부족
 - 참여적 거버넌스 : 계획-이행-평가 전 과정에의 지방정부-시민사회-기업 3자 참여 구조 기반
 - 환경부서 중심 행정담당체계로 인한 경제·사회분야 통합 제한

○ 인구학적 특징

- 조사지역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포괄 규모 : 47.36%
- 조사지역의 인구규모 특성 : 평균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metropolitan) 지역

○ 지역 경제여건

- 조사지역의 우리나라 경제력 포괄 규모 :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50.02% 차지
- 조사지역의 경제 여건 1 : 외생적 경제 영향 높은 편
- 조사지역의 경제 여건 2 :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총소득 및 개인(주민)소득 낮은 편

○ 지자체 재정자립도

-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량 재정 : 평균 37.09%

○ 지역 CSD 예산 현황

- 조사지역 LCSD의 평균 예산 규모 : 약 3억 2천만 원, 담당부처 예산의 0.22% 차지

III.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로 본 지역 CSD 실천사업의 특징

- 풀뿌리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통로 역할 : 전체 활동의 50%가 교육 및 거버넌스 관련 활동
-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장(場) : 전체 활동의 29%가 교육 활동
- 환경이슈의 주류화 여전, 한편, 공동체 생활 등 사회이슈로의 점진적인 확장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4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 가장 활발 : 교육, 평화/정의/제도, 육지생태계, 도시
- 경제, 사회, 이행수단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 취약 : 빈곤, 건강/복지, 성평등, 일자리, 산업, 이행수단

○ 유엔해비타트 新도시의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5개 도시의제 활동 가장 활발 : 기초서비스(교육), 도시생태환경, 기후변화, 법제도, 거버넌스
- 사회융합 및 형평성, 도시경제, 도시공간계획, 지방재정 분야 의제 활동 취약

○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인식제고(교육), 기후변화대응, 생태계서비스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 활동 부재 :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심
- 전통적 환경보호관리 중심 활동 → 지역 내 생태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중심 활동으로 전환 필요

IV. 지역 CSD 거버넌스 역량 현황

○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인적자원 현황

- 시민단체, 기업/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4개 그룹 참여 활발
- 기업/산업계의 높은 참여율에 비해 노동계 참여율 미미
- 여성계 및 청소년 참여율 저조한 편
- 기초단위 지역에서 '자치조직'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특징

○ 지역CSD 거버넌스 활동 성과 : 설문 조사 결과

<설문개요>

- 설문목적 :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 이해도 및 거버넌스 참여정도 측정
- 조사기간 : 2015.9.23.~2015.10.30.
- 설문대상 : 2015년 24개 지역 CSD 참여위원 및 사무국 실무자 640명
- 조사방법 : 24개 지역 CSD 사무국을 통한 이메일 설문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 40대 이상 장년층, 남성, 대졸 이상 고학력자, 시민단체 활동가, 교육계 종사자 및 의제사무국 실무자, 5년 중단기간 참여자 다수(평균 참여기간 5.2년)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이해 정도 종합>

- 회의나 워크숍 참석, 관련 업무 취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높음.
→ 40대 이상 고학력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의제사무국 실무자 응답자 특성이 반영.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전문분야의제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조금 높은 편이나,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 및 이해도는 낮은 편.
-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개념, 행정 중심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중심 거버넌스의 차이, 시민운동과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나,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들 속에서 지역CSD의 역할과 기능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지역 CSD 참여 활동이 관계자의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

<거버넌스 활동 현황 종합>

- 지역 CSD 참여 이후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경험이 풍부해진 것으로 조사.
→ 40대 이상 고학력의 시민단체 활동가, 의제사무국 실무자 응답자 특성이 반영.
- 지역 CSD 참여 이후, 전반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민원탁토론회를 통한 거버넌스 참여 활동이 증대.
→ 지역 CSD가 참여위원들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확장에 크게 기여.

- 지역 CSD의 목표설정 및 이행단계 거버넌스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사업 및 목표 평가단계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의제 목표 및 실천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나 방법체계 구축이 필요.

<종합정리>

- 지역 CSD 참여자의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場)
- 지역 CSD 참여자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기회/통로 제공.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인큐베이터
- 자문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이행 수준의 거버넌스로 진일보.
→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 기여

V. 결론 : 성과와 과제

○ 지역 차원 추진 과제

- 1) 사회 및 경제 분야 주체 참여 확대 및 이슈 통합
- 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대상 사업 확대 : 지방정부 세출예산의 1%
- 3) 지속가능발전 행정담당체계 전환 : 환경부서 → 시정 총괄부서
- 4) 국제 이행목표 연계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재작성 또는 수립
- 5)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6)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 성별, 연령별 데이터 및 사업내용의 수치화
- 7) 지역 내 시민사회 활동사례 온라인 정보망 구축 : 시민사회 온라인 사전(엔지오피디아)


○ 범 국가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치·정책적 연대·협력 과제

- 1) 국가의 지역차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견인을 위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검토보고서' 작성
- 2) 상향식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연대·협력
- 3) 지방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그룹과의 연대·협력
- 4) 세계 지속가능발전 운동 촉진 및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24개 조사지역 특징

<p>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포괄 규모 (24개 지역 총 인구 비율)</p> <p>47.36%</p>	<p>평균 인구 규모</p> <p>50만 명 이상 대도시 (Metropolitan city)</p>	<p>우리나라 경제력 포괄 규모 (24개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p> <p>50.02%</p>
<p>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p> <p>37.09%</p>	<p>지역 CSD 평균 예산 규모</p> <p>3억 2천만 원</p>	<p>담당부처 예산 대비 지역 CSD 평균 예산 비중</p> <p>0.22%</p>
<p>외생적 경제기반</p>	<p>낮은 지역 총소득 낮은 개인소득</p>	<p>환경부서 행정담당체계</p>

※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24개 지역 실천사업 및 참여 주요그룹 특징

<p>교육 거버넌스 전체 50%</p>	<p>지속가능발전 교육 전체 29%</p>	<p>4개 주요그룹 (시민단체, 기업/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p>
<p>SDGs 4, 11, 15, 16 (교육, 도시, 육지생태계, 거버넌스)</p>	 <p>Urban Frameworks Urban Ecology & Environment Urban Housing & Basic Services</p>	<p>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 1, 10, 14 (인식제고, 기후변화, 생태계서비스)</p>
	<p>신도시의제 5, 6, 16, 17, 18 (법제도, 거버넌스, 도시생태환경, 기후변화, 기초서비스)</p>	

※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24개 지역 CSD 거버넌스 활동 성과(설문조사 결과)

평균 5.2년 활동	40대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의제사무국 실무자
높은 SD개념 이해 높은 지역의제 이해 낮은 국가/국제 SD 이해	보통 거버넌스개념 이해 낮은 거버넌스 종류 이해	SD 및 거버넌스 이해 항상 크게 기여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참여 기회/통로 제공	◆	목표 설정 및 사업이행 중심 참여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2016년 10월 유엔 해비타트 ‘新 도시의제’ 채택 등 본격적인 세계 지속가능발전 노력 확산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및 실천사업의 현황과 성과 파악 필요.
-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기구의 법적, 사회적 제도화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필요.

2. 연구목적

- 1) 지역 의제 및 실천사업 내용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 지역지속가능발전 활동성과의 체계화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 ‘유엔해비타트 新도시의제’와 우리나라 지역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실천 활동 연계 분석.
- 2)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인적 자원 분석 → 거버넌스 참여그룹의 다양화
 - 유엔협약에 따른 9개 주요그룹+@를 기준으로 지방의제 거버넌스 참여그룹 분포 분석.
- 3)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 분석 → 거버넌스 활동의 전략화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위원 및 실무자 설문조사

3. 연구방법

- 1) 문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新도시의제
 - 지역 의제 및 실천사업보고서, 총회자료집
 - 지역별 기본통계(인구분포, 지자체 재정자립도, 1인당 개인소득 등)
 - 전국 지방의제21 추진현황 통계(2015)
- 2) 설문조사 : 위원 및 실무자 인식도 및 거버넌스 참여현황
 - 지방의제21 거버넌스 이해 및 참여 현황
 - 지방의제21 이외 거버넌스 활동 참여 현황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참여단위별 임의할당 표본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
- 표본구성 및 크기 : 신뢰수준 95%, 오차한계 10%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총 표본 수
설문인원	50%	50%	100%	총 인원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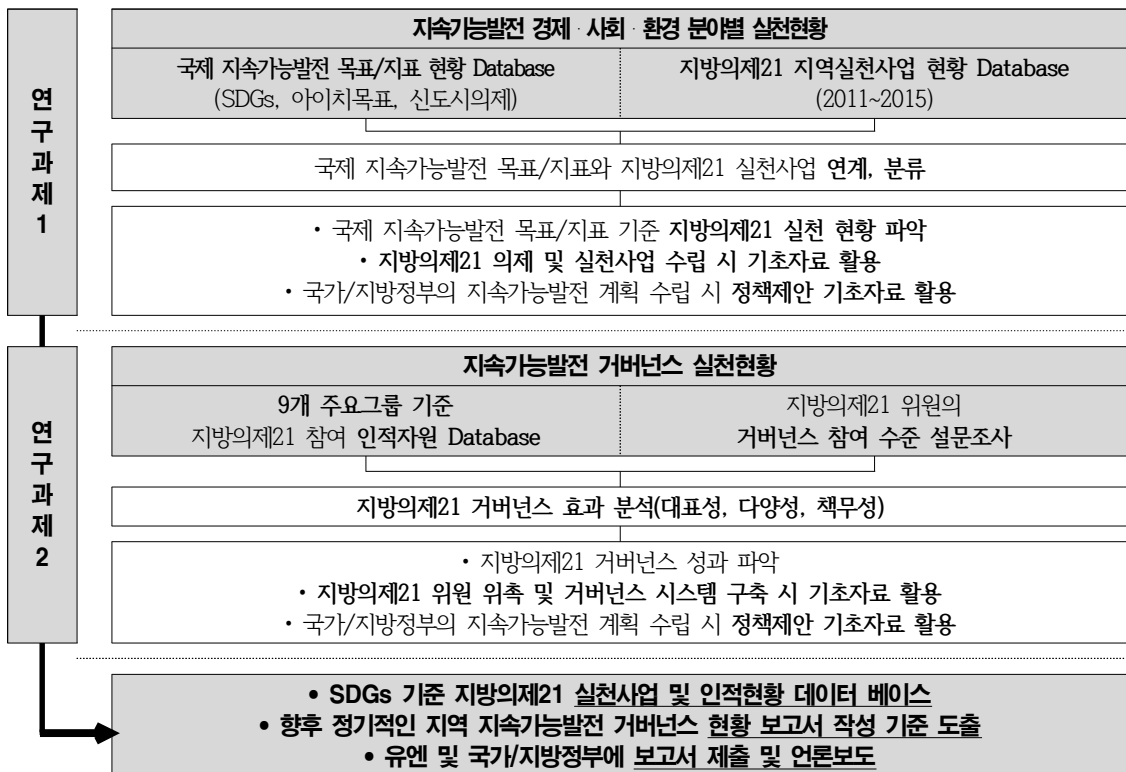
3) 비교분석

- 지역 간 비교 : 전국일반현황 기준 사업참여지역 현황 비교
- 지역별 시점기준 변화추이 비교

4.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24개 사업 참여 지역
- 내용적 범위
 - 의제21, 실천사업, 거버넌스 참여 인원 분포 현황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 新도시의제 기준 분류, 연계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5년(5개년)

5. 연구의 방향



6. 연구내용

○ [문헌조사] 지역 실천내용의 국제정책 연계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 지역 의제 및 실천사업 현황
-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 기준 지역 의제 및 실천사업 현황
- 유엔해비타트 新도시의제 기준 지역 의제 및 실천사업 현황
- 광역 및 기초 기준 전체 현황 통계, 지역별 현황

○ [기존 데이터 분석]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인적 자원 분석

- 9개 주요그룹 기준 추진기구(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
 - ※ 9개 주요그룹: 여성, 청소년, 노동계,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민, NGOs, 지방정부, 원주민
- 시점별 참여그룹 변화 추이
- 광역 및 기초 기준 전체 현황 통계, 지역별 현황

○ [설문조사]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성과 분석

- 거버넌스 참여그룹의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변화
- 거버넌스 참여그룹의 거버넌스 이해도 변화
- 지방의제21 위원의 지역사회 내 다른 거버넌스 기구 활동 현황
- 광역 및 기초 기준 전체 현황 통계, 지역별 현황

○ [기존 데이터 분석] 일반현황

-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의제수립, 추진기구, 상근인력, 예산규모)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현황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현황(조례)
-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소득 현황
-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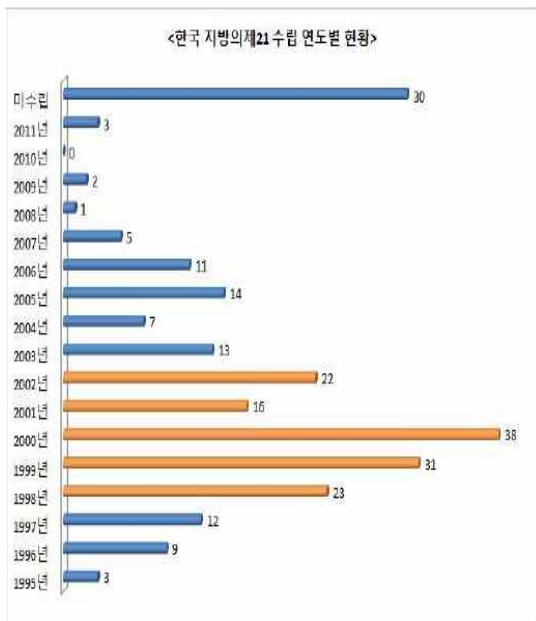
II. 기본현황

1.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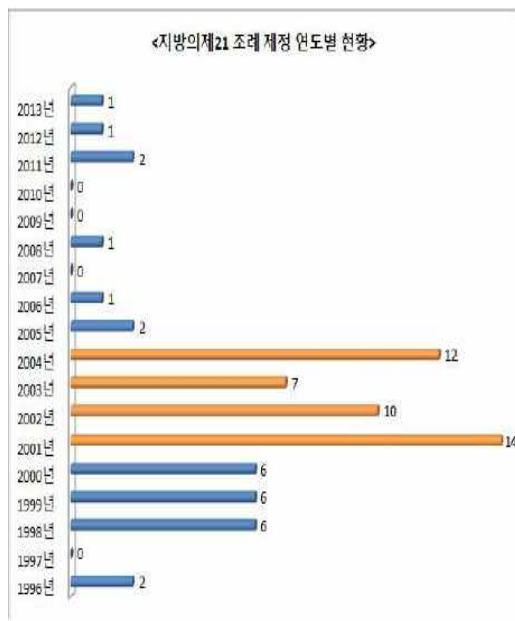
□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제도화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994년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운동 과제으로써 <의제21>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1994년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역자치 운동과제로 <지방의제21>을 시민사회에서 적극 추진.
-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지방의제21>은 1995년 부산광역시가 처음이며, 이후 <지방의제21> 수립 지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총 240개 지자체 중 210개(87.5%)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 또한, 2015년 현재, 총 71개 지자체(33.8%)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지원 조례’를 수립.

<그림 2-1>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수립 연도별 현황(2015년 기준)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지원 조례 제정 연도별 현황(2015년 기준)



- 국가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1996년 <의제21 국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고서에 그쳤다가, 2000년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하면서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심의, 조정, 평가 활동 등이 활발히 추진.
-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 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1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3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6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이행계획>(7월)이 발표될 예정.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와 지역 지속가능발전 그룹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은 부재한 상황.
- 향후, 실질적인 국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위상 재정립이 필요.

<그림 2-3> 우리나라의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20)(2016.1.12. 발표)

□ 2016-2020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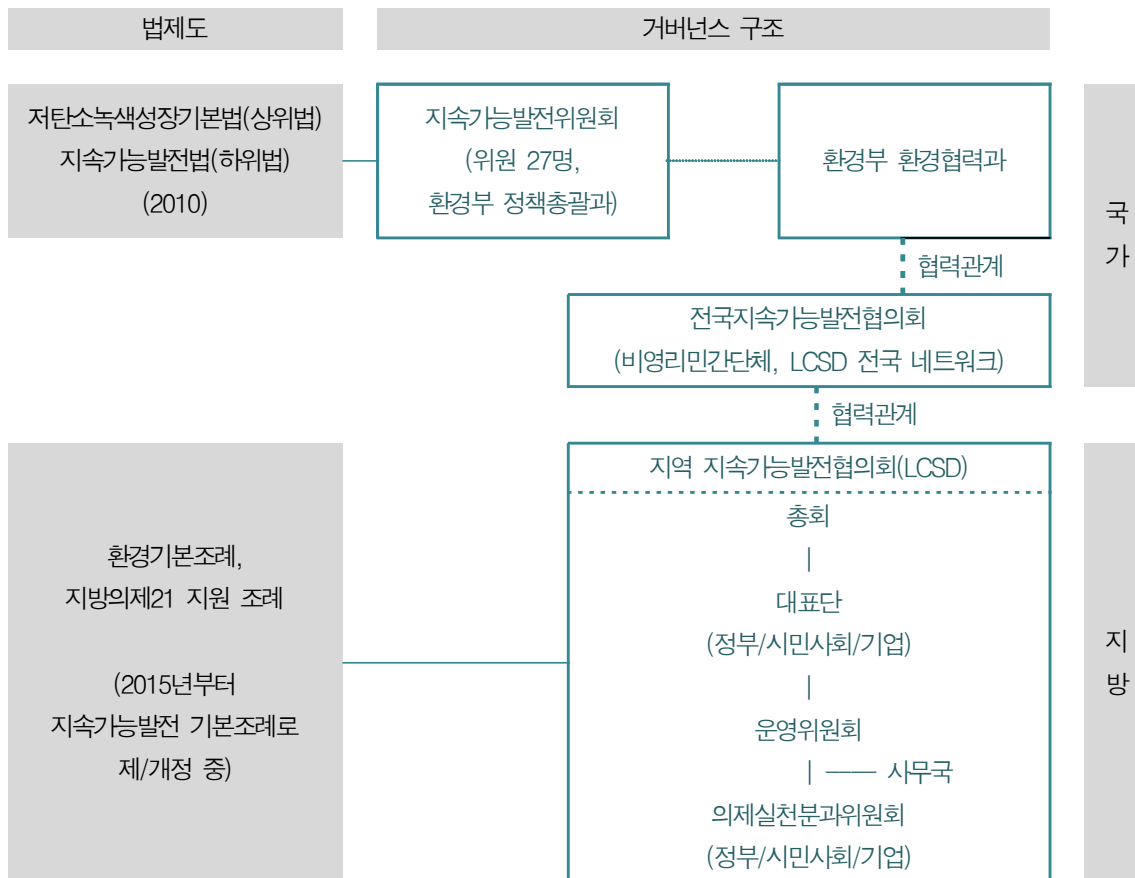
목표	전략	이행과제
① 건강한 국토 환경	①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②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③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 깨끗한 대기질 : 미세먼지, 전기차 - 도시생태공간 : 도심천수공간, 쌈지숲 - 오염배출 체계 : 통합환경관리제 등 - 육상 및 담수생태계 : 생태축, 보호지역 확대 - 생물다양성 : 나그네야생서, 멸종위기/기후변화 취약종 관리 - 연안해양생태계 : 오염총량관리, 갯벌습지/해양 보호 - 안전한 식수 : 상수도인프라, 정수시설, 농어촌상수도 - 상수원 수질개선 : 오염총량관리, 유해물질, 농촌 비점오염원 - 물 순환체계 : 통합 물 관리, 물 저류, 환경생태유량 등
② 통합된 안심 사회	④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⑤ 지역간 격차 해소 ⑥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⑦ 안전 관리기반 확충	- 사회안전망 : 기초생활보장, 서민 주거, 취약계층 에너지 - 고용-복지연계 : 고용복지센터, 사회보험/퇴직금, 실업급여 - 양성평등 : 제도 기반, 여성 경제활동 지원 - 지역경제 : 6차 산업 발굴 지원, 도로/철도/항만개선 - 농산어촌 복지정주 : 농업인 복지서비스, 수산 정책보험 등 - 지속가능 관광 : 지역관광자원 개발, 생태관광 모델 육성 - 건강관리 : 맞춤형 건강검진, 환경성 질환 관리 - 어린이 건강 : 환경보건조사, 환경성질환 관리 등 - 감염병 : 24시간 긴급상황실/대응팀 운영, 거버넌스 개편 - 휴양치유 인프라 : 맞춤형서비스, 국립공원 생태체험/휴양기능 - 화학물질 : 관리강화,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 도시안전 인프라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안전 관리 - 자연재해예방 : 홍수 저류공간, 댐 안정성, 기후변화대응
③ 포용적 혁신 경제	⑧ 포용적 성장 및 일질의 일자리 확대 ⑨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 일자리/창업 : 청년 일자리, 혁신형 창업지원 - 고용안정과 공정거래 : 정규직 전환, 불공정거래 감시 - 첨단융합기후변화R&D : 핵심기술R&D, 에너지기술 등 - 자원순환 : 상과관리제, 재활용 네거티브제 등 - 청정생산/환경경영 : 청정생산기술, 기업환경정보 금융지원연계 - 친환경 생산/소비 : 녹색제품, 녹색건축, 저탄소생활 - 에너지수요관리 : 전기요금제, 수요관리 핵심기술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 에너지 안전관리 :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④ 글로벌 책임 국가	⑪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⑫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⑬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개도국 지원 : ODA규모 확대, 경제/사회/환경 통합 지원 - 국제기구 협력 : UNDP, UNCEF 등 - 신기후체제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기술협력 -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거래제, 탄소시장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패시브건축, 저탄소교통물류체계 등 - 적응역량 : 기후변화 적응 체계, 위험관리 등 - 동북아 환경협력 : 황사, 사막화, 해양오염, DMZ평화공원, 북한 산림 복구
	⑭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

□ 국내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관련하여, 2016.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유엔 SDGs 이행체계 확정 이후, 추진계획 마련 예정.

□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조적 연계 부족

- 1995년부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지방의제21)와 2000년 설립된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풀뿌리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구축. 그러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강등된 이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동간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이 거의 단절.
- 이는,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부 소통채널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담당부서인 정책총괄과가 아닌 민간단체 협력 업무 담당부서인 환경협력과라는 점,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적인 연계 부족이 요인.
- 결과적으로,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20)> 수립과정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2016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
- 20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이 명시화되었으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간 교류/협력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지 않는 한, 국가-지방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단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 2-4>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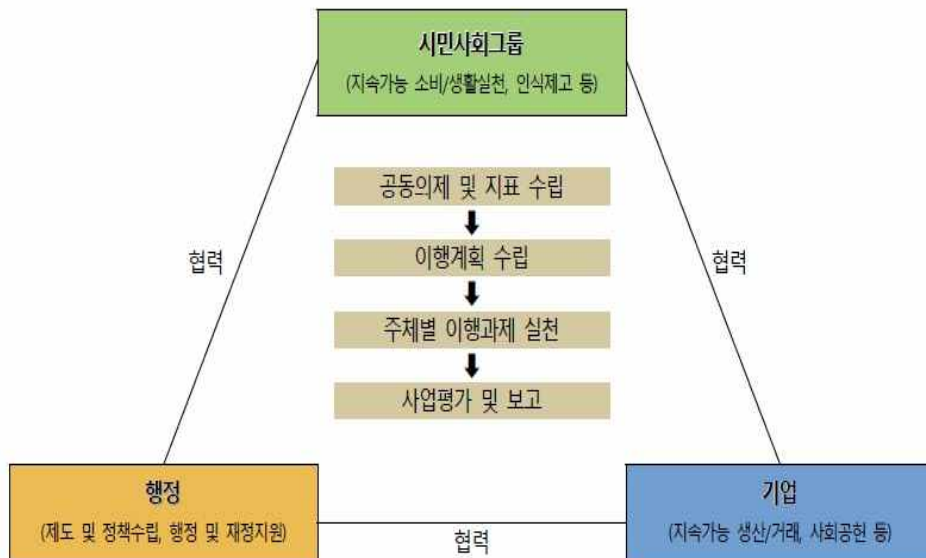


□ **참여적 거버넌스 : 계획-이행-평가 전 과정에의 지방정부-시민사회-기업 3자 참여 구조 기반**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3자를 당사자로 하여, 목표 및 계획 수립-실천-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조직.
-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치적 대표로써 지방정부(시장 또는 부시장),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운영단위로 ‘운영위원회’, 실천단위로 ‘의제 실천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실무지원을 위한 상근 사무국을 설치.
- 조사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운영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8개 주요그룹(유엔 9개 주요 그룹 중 ‘원주민’ 제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한 추진기구 당 100~150명의 위원으로 구성.
- 기본 참여 단위는 ‘의제 실천분과위원회’이며, 운영위원회는 실천분과위원회에서 선발된 위촉위원과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회 사무국 대표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위원은 보통 2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며, 기존 위원의 추천과 참여그룹의 다양성을 위한 특정 그룹 안배를 통해 위촉.
- 매년 총회를 통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연간 4~6회의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분과별로 의제 실천을 위한 사업기획과 이행, 평가가 수시로 진행.

<그림 2-5>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기구) 참여 구조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참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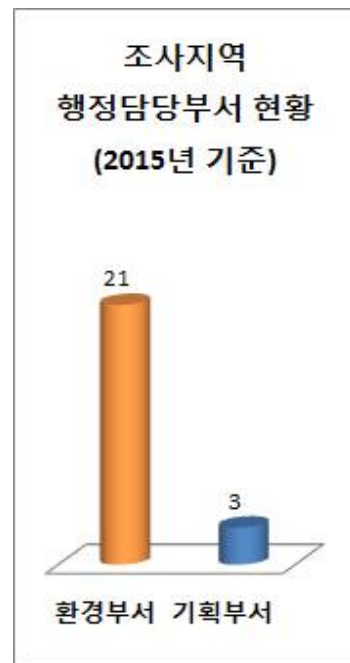
□ 환경부서 중심 행정담당체계로 인한 경제사회분야 통합 제한

- 조사 대상 24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행정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환경부서가 21 곳, 기획정책부서가 3곳으로, 환경부서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구축.
-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가 환경부인 영향이 가장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기획정책총괄부서로 이관.
- 지역별로 의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부서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정 계획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계획' 통합은 미미한 실정.
- 이는, 1)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분야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지자체의 인식, 2) 환경부서의 행정구조적 한계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
-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 기획부서 행정담당체계 전환 필요.

<표 2-1> 조사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행정 담당부서 현황(2015년 기준)

행정단위	지자체명	행정 담당부서	비고	
광역시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	환경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	
광역시도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충청북도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환경	
기초시	경기 과천	환경위생과	환경	
	경기 광명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군포	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	
	경기 김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환경	
	경기 부천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성남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수원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시흥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안산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	
	경기 안양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환경	
	경기 의왕	도시개발국 녹색환경과	환경	
	경기 화성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환경	
	강원 강릉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	
	강원 원주	환경녹지국 환경과	환경	
	충북 청주	상생협력담당관실	기획	
	충남 아산	시민행복기획실 정책담당관	기획	
	기초구	인천 남구	기획조정실 기획팀	기획

<그림 2-6> 조사지역
행정 담당부서 현황(2015년 기준)



2. 조사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여건

1) 인구

<표 2-2> 우리나라 총 인구규모 및 조사지역 인구현황(2013년 기준)

구분	총 인구	남	여	비중(%)	
우리나라 총 인구규모(명)	51,141,463	25,588,336	25,553,127	100.00	
조사지역 인구규모 (명)	소계	23,258,569	11,679,038	11,579,531	45.47
	대구광역시	2,524,890	1,259,143	1,265,747	
	광주광역시	1,472,910	730,216	742,694	
	대전광역시	1,532,811	767,309	765,502	
	경기도	12,234,630	6,159,193	6,075,437	
	충청북도	1,572,732	792,862	779,870	
	충청남도	2,047,631	1,037,421	1,010,210	
	전라북도	1,872,965	932,894	940,071	
	소계	8,562,706	4,329,851	4,232,855	16.74
	경기 과천	70,875	34,492	36,383	
	경기 광명	357,707	177,198	180,509	
	경기 군포	292,000	145,482	146,518	
	경기 김포	325,543	167,659	157,884	
	경기 부천	880,907	441,381	439,526	
	경기 성남	995,349	495,853	499,496	
	경기 수원	1,178,509	593,469	585,040	
	경기 시흥	422,817	223,984	198,833	
	경기 안산	762,915	393,949	368,966	
	경기 안양	614,687	306,254	308,433	
	경기 의왕	161,023	80,570	80,453	
	경기 화성	558,128	294,441	263,687	
강원 강릉	218,369	108,395	109,974		
강원 원주	327,381	162,876	164,505		
충북 청주	679,301	338,152	341,149		
충남 아산	299,129	154,481	144,648		
인천 남구	418,066	211,215	206,851		

* 출처: 국가통계포털

□ **조사지역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포괄 규모 : 47.36%**

- 2013년 인구통계 기준, 조사대상 지역 총 인구규모는 24,222,385명¹⁾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이 포괄하는 인구규모는 대한민국 총 인구 대비 47.36%를 차지.
- 한편, 조사 대상 7개 광역시/도 인구는 총 23,258,569명, 17개 기초시/군/구 인구는 총 8,562,706명으로, 전체 광역시/도 지역의 45.47%, 전체 기초 시/군/구 지역의 16.74%를 차지.

□ **조사지역의 인구규모 특성 : 평균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metropolitan) 지역**

- OECD 분류기준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평균 인구규모 3,322,653명으로 대대도시, 기초시/군/구의 경우, 평균 인구규모 503,689명으로 대도시로 분류.

<표 2-3> 인구규모에 따른 OECD 도시 분류와 조사지역 현황

분류기준	조사 지역
메가시티(Megacity)(1,000만 이상)	경기도
대대도시(Large Metropolitan)(1.5백만 이상)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대도시(Metropolitan)(50만~1.5백만 미만)	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청주
중도시(Medium size)(20만~50만 미만)	광명, 군포, 김포, 시흥, 강릉, 원주, 아산, 인천 남구
소도시(Small urban area)(5만~20만 미만)	과천, 의왕

* 분류기준 : OECD Data, <https://data.oecd.org/popregion/urban-population-by-city-size.htm>

1) 조사대상 7개 광역지자체와 17개 기초지자체 인구를 합산(광역지자체 인구수에 포함된 기초지자체 인구수는 제외).

2) 지역내 총생산/총소득/개인소득

<표 2-4> 전국 및 조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개인소득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지역내총생산 ²⁾ (시장가격) (백만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 (천원)	1인당 지역총소득 ³⁾ (천원)	1인당 개인소득 (천원)	개인소득율 ⁴⁾	
전국	1,484,541,954	29,441	29,670	16,564	0.56	
조사 지역 (광역 단위)	소계	742,521,737	26,570	25,636	15,473	0.60
	대구광역시	46,592,152	18,941	22,884	15,975	0.70
	인천광역시	68,373,633	23,921	25,679	15,439	0.60
	광주광역시	30,998,431	20,448	22,771	15,472	0.68
	대전광역시	32,722,635	21,170	24,348	16,495	0.68
	경기도	329,448,671	26,827	28,956	16,058	0.55
	강원도	36,886,185	24,574	22,039	14,540	0.66
	충청북도	49,136,681	31,389	26,689	15,011	0.56
	충청남도	103,739,990	47,024	34,990	15,723	0.45
전라북도	44,623,359	24,832	22,364	15,322	0.69	

* 출처: 국가통계포털(2014년 통계 기준, 잠정치)

□ 조사지역의 우리나라 경제력 포괄 규모 :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50.02% 차지

- 2014년 지역내총생산(잠정치) 통계 기준, 조사대상 지역의 광역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은 742,521,737백만 원으로,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50.02%를 차지.

□ 조사지역의 경제 여건 1 : 외생적 경제 영향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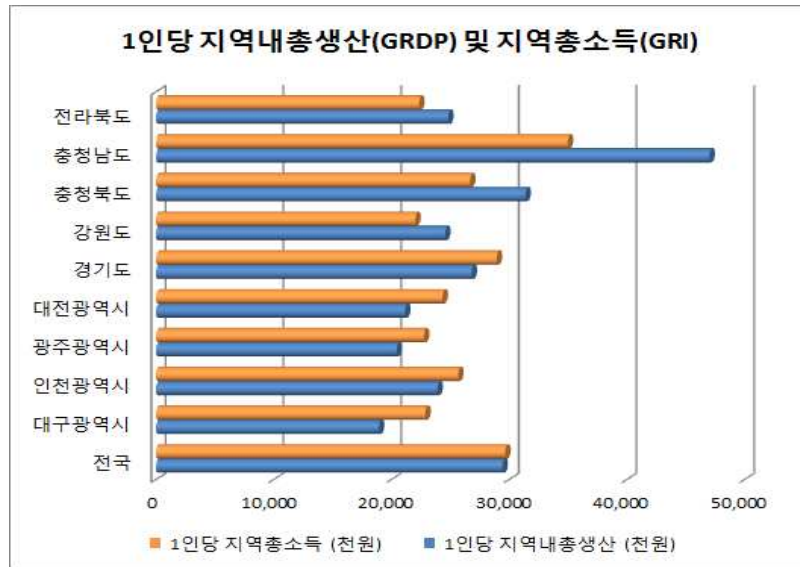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 비해 지역총소득(GRI)이 낮다는 것은 타 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지역 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
- 조사 대상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6,570천원에 비해 1인당 지역내총소득은 25,636천원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외부 자원 중심 경제활동이 높은 편.
- 지역별로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이며, 특히,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편으로, 내생적 경제역량 증대 필요.

2) 지역내총생산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 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합계액은 기초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GDP와 3~5%의 차이가 발생.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452,000원(국가통계포털).

3) 지역총소득(GRI : Gross Regional Income)이란, 지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지역총생산, GRDP)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가계), 기업, 정부 소득으로 구성. 한편,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I)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타 지역과의 거래가 없다면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이론상 일치해야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활동이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차이 발생. $GRI(\text{지역총소득}) = GRDP(\text{지역내총생산}) + \text{지역 외 순수취분원소득} = \text{지역주민(기업)이 타 시/도에서 얻은 소득} - \text{타 지역 주민(기업)이 도내에서 얻은 소득}$.

4) 지역총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1에 가까울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많아진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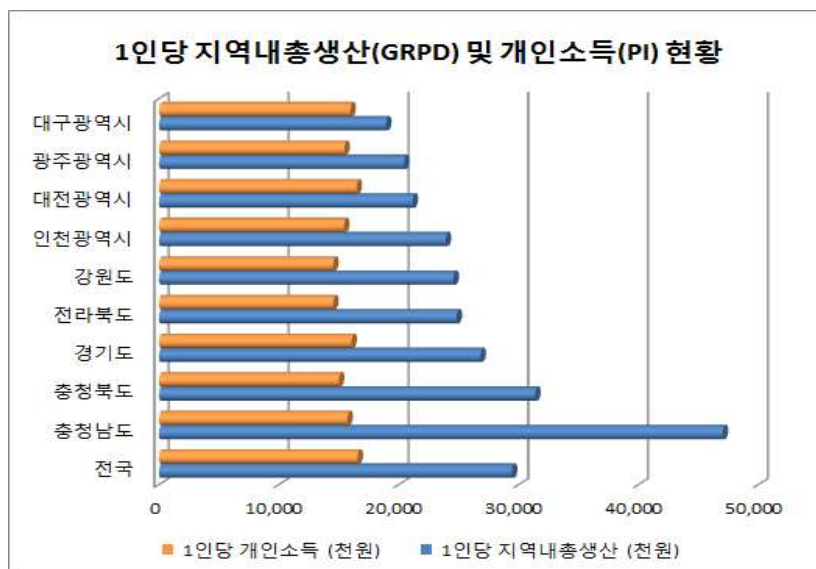
<그림 2-7> 조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총소득(GRI) 현황(2014년 기준)



□ 조사지역의 경제 여건 2 :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총소득 및 개인(주민)소득 낮은 편

- 24개 조사지역이 속한 9개 광역행정단위의 평균 1인당 지역총소득은 25,636천원, 개인소득은 15,473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이 낮은 편.
- 다만, 지역총소득의 분배 현황을 보면, 개인소득율이 0.60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전국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
-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개인소득율이 0.45로, 조사 대상 지역 평균뿐만 아니라,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아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지역 내 경제 성장이 주민소득 향상과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

<그림 2-8> 조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및 개인소득(PI) 현황(2014년 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⁵⁾

<표 2-5> 전국 및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전국평균	특별/광역시평균	도 평균	시 평균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50.3	64.8	33.2	36.5	31.1	
조사 지역 재정 자립도	소계	37.09	42.19	29.51	39.16	18.98
	대구광역시	44.45	44.45	-	-	-
	광주광역시	36.81	36.81	-	-	-
	대전광역시	45.32	45.32	-	-	-
	경기도	50.52	-	50.52	-	-
	충청북도	23.12	-	23.12	-	-
	충청남도	26.10	-	26.10	-	-
	전라북도	18.28	-	18.28	-	-
	경기 과천	44.52	-	-	44.52	-
	경기 광명	32.59	-	-	32.59	-
	경기 군포	37.83	-	-	37.83	-
	경기 김포	42.05	-	-	42.05	-
	경기 부천	37.99	-	-	37.99	-
	경기 성남	54.16	-	-	54.16	-
	경기 수원	48.18	-	-	48.18	-
	경기 시흥	42.64	-	-	42.64	-
	경기 안산	41.21	-	-	41.21	-
	경기 안양	44.43	-	-	44.43	-
	경기 의왕	34.64	-	-	34.64	-
	경기 화성	57.12	-	-	57.12	-
강원 강릉	17.80	-	-	17.80	-	
강원 원주	22.95	-	-	22.95	-	
충북 청주	28.45	-	-	28.45	-	
충남 아산	40.03	-	-	40.03	-	
인천 남구	18.98	-	-	-	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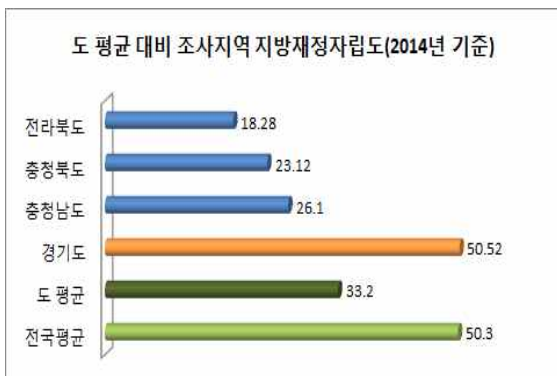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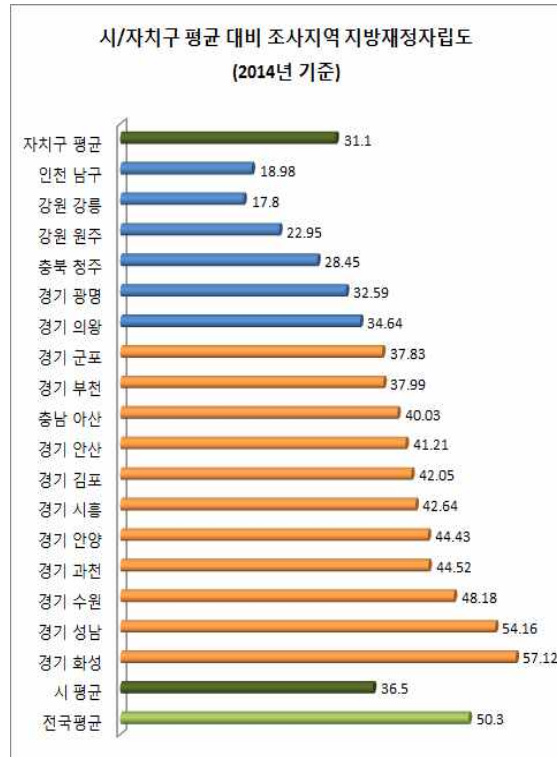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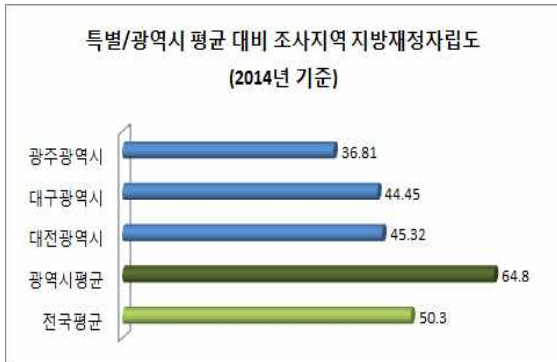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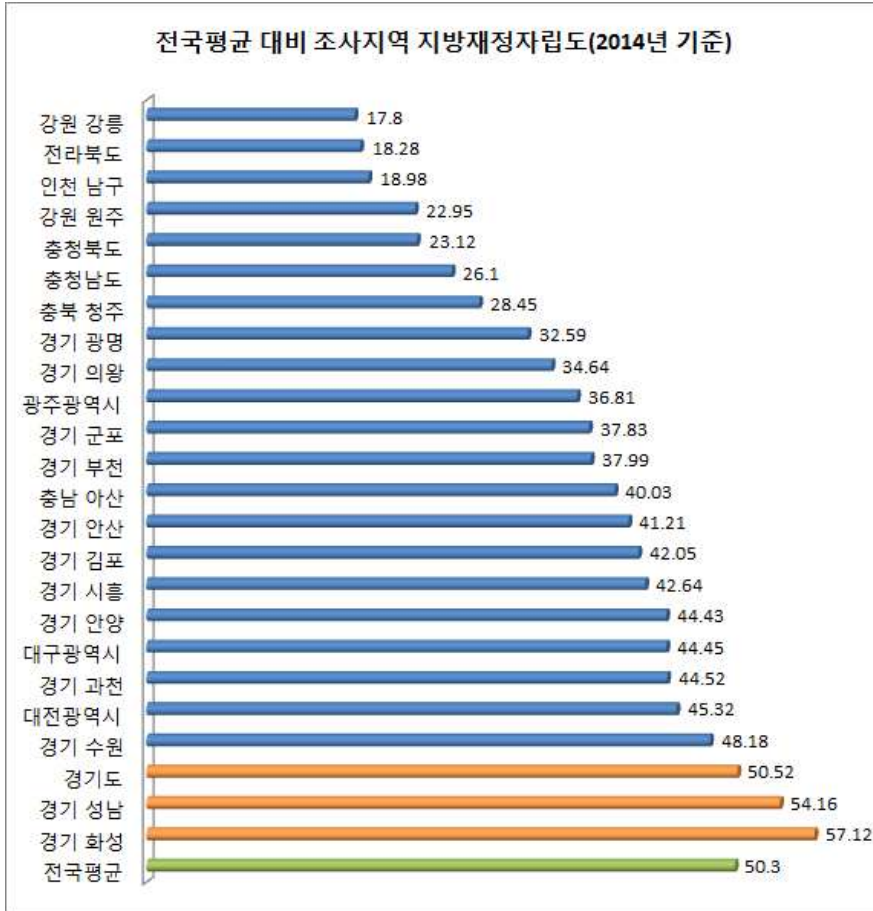
* 출처: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2015 지방재정고시

□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량 재정 : 평균 37.09%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3%로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조사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09%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하회하며 상당히 취약한 편.
-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조사 대상 광역시/도, 구의 경우,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반면, 기초시의 경우, 39.16%로 전국평균 36.5%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편.

5)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

<그림 2-9> 전국평균 대비 조사지역 지방재정자립도(2014년 기준)



4)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체(LCSD)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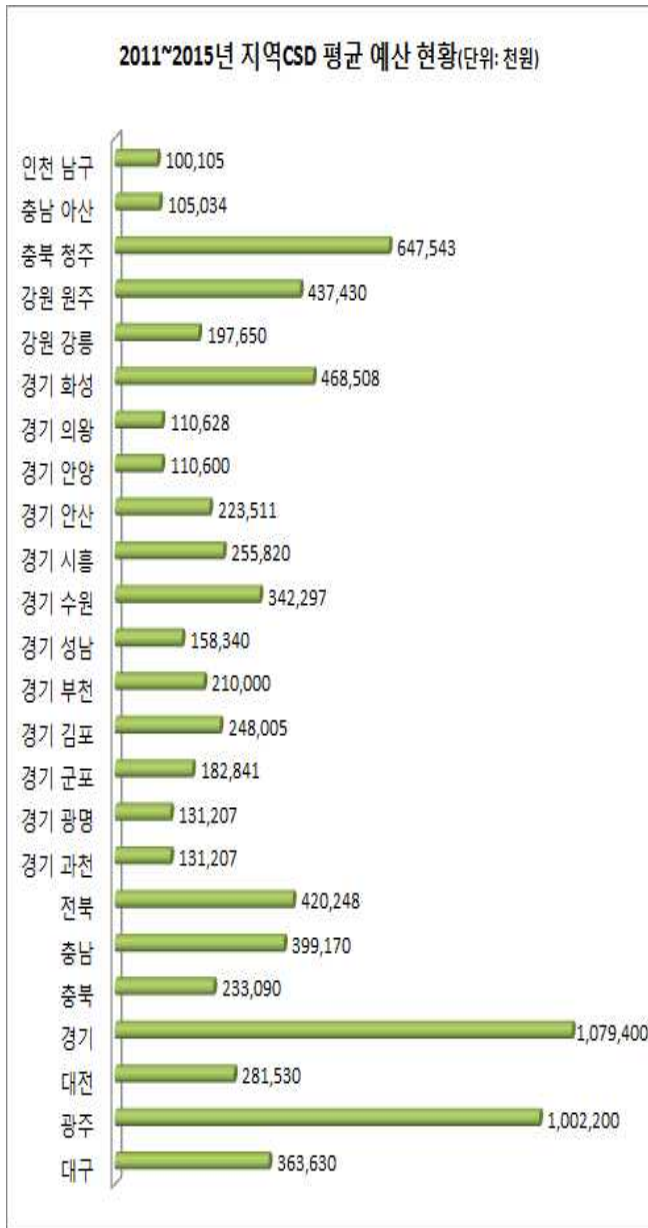
□ 조사지역 LCSD의 평균 예산 규모 : 약 3억 2천만 원, 담당부처 예산의 0.22% 차지

- 24개 조사지역 지역CSD의 전체 평균 예산은 326,666천원으로, 행정 담당부처 예산의 0.22%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예산규모 운영.
- 이는, 1) 24개 조사지역 지자체들의 37.09%의 상당히 낮은 재정자립도, 2) 환경부서 내 ‘민간경상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이라는 정치·행정구조적 한계와 3)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정치적 의지와 역량 미흡 등 정치·사회적 한계가 큰 요인.

<표 2-6> 조사지역의 지역CSD/담당부처/지방정부의 2011-2015년 평균 예산 및 비중 현황

구분	지역 CSD (천원)	담당부처 (천원)	지방정부 (천원)	지역CSD/ 담당부처(%)	담당부처/ 지방정부(%)	지역CSD/ 지방정부(%)
전체평균	326,666	149,722,063	2,412,290,676	0.22	6.21	0.014
광역시 평균	549,120	162,891,673	3,430,047,940	0.34	4.75	0.016
광역시도 평균	532,977	357,213,486	7,584,363,900	0.15	4.71	0.007
기초시 평균	247,539	90,880,832	1,055,366,025	0.27	8.61	0.023
대구	363,630	178,829,728	5,963,696,200	0.20	3.00	0.006
광주	1,002,200	155,370,616	539,031,819	0.65	28.82	0.186
대전	281,530	154,474,676	3,787,415,800	0.18	4.08	0.007
경기	1,079,400	343,060,721	16,976,495,800	0.31	2.02	0.006
충북	233,090	278,077,975	3,504,821,600	0.08	7.93	0.007
충남	399,170	457,851,343	4,953,715,000	0.09	9.24	0.008
전북	420,248	349,863,905	4,902,423,200	0.12	7.14	0.009
경기 과천	131,207	9,966,659	338,684,400	1.32	2.94	0.039
경기 광명	131,207	49,619,374	545,950,400	0.26	9.09	0.024
경기 군포	182,841	59,770,782	487,741,600	0.31	12.25	0.037
경기 김포	248,005	81,873,340	764,819,800	0.30	10.70	0.032
경기 부천	210,000	51,664,704	1,201,919,600	0.41	4.30	0.017
경기 성남	158,340	147,199,522	2,348,694,200	0.11	6.27	0.007
경기 수원	342,297	110,973,783	1,810,594,800	0.31	6.13	0.019
경기 시흥	255,820	49,839,311	1,114,943,200	0.51	4.47	0.023
경기 안산	223,511	167,261,835	1,614,969,400	0.13	10.36	0.014
경기 안양	110,600	74,309,794	900,453,000	0.15	8.25	0.012
경기 의왕	110,628	60,917,865	276,140,400	0.18	22.06	0.040
경기 화성	468,508	259,835,343	1,184,671,000	0.18	21.93	0.040
강원 강릉	197,650	149,560,060	647,815,200	0.13	23.09	0.031
강원 원주	437,430	90,382,877	803,003,600	0.48	11.26	0.054
충북 청주	647,543	1,967,560	2,007,739,000	32.91	0.10	0.032
충남 아산	105,034	88,950,501	837,716,800	0.12	10.62	0.013
인천 남구	100,105	221,707,226	381,520,400	0.05	58.11	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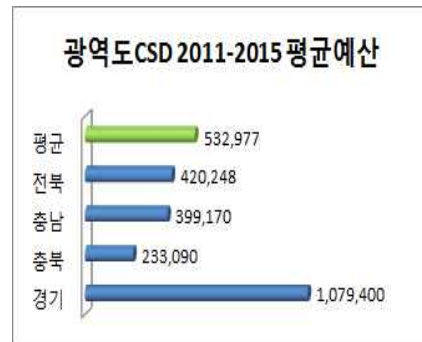
<그림 2-10> 조사지역의 지역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그림 2-11> 광역시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그림 2-12> 광역도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그림 2-13> 기초시CSD
2011-2015 평균 예산 현황(단위: 천원)



III.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1. 개관

1) 조사연구 목적

- ‘지속가능발전’, ‘도시’,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국제 이행목표를 실천하는데, 지역차원의 활동이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적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실천 활동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
- 조사연구대상 3개 주요 국제 이행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15-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유엔, 2015년 9월 채택)
 - <2016-2036 유엔 해비타트 III 新도시의제>(유엔 해비타트, 2016년 10월 채택 예정)
 - <2011-2020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2010년 채택)

2) 조사연구 범위

- 시간범위 : 2011년~2015년, 총 5년
- 조사연구 대상
 - 3개 주요 국제 이행목표
 - 24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분과사업, 기획/정책사업)(총회자료집)

3) 조사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 통계 조사 및 분석.
 - 문헌자료 : 총회자료집, 국가 및 지방정부 통계자료, 유엔 국제 이행목표 문건자료
- 상기 3개 주요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CSD의 실천사업 내용들을 연계.분석하기 위하여,
 - ① SDGs(17개), 신도시의제(22개), 아이치목표(20개)의 주요목표에 명시된 키워드 추출.
 - 총 59개 키워드 중 중복 용어를 제외하고 최종 50개 키워드 추출.
 - ② 실천사업의 목적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1개 사업 당 1~5개의 키워드 연계.
 - 국제 이행목표의 세부목표 내용을 기준으로, 키워드 별로 해당 실천사업 내용 범위 규정.
 - ③ 키워드 빈도수 측정을 통해 실천사업의 내용.성격 특징 분석 및 국제 이행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도출.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이행목표 현황

1) 2015-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표 3-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주요내용
목표1. 빈곤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목표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 영양개선 ,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목표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 보장, 모든 연령대의 복지 추진
목표4. 교육	포용적이고 동등한 질의 교육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목표5. 양성평등	양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목표6.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7. 에너지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에의 접근 보장
목표8. 일자리와 경제성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고용 및 생산적인 고용 ,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목표9. 산업, 혁신, 기반시설	복원력 있는 기반시설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혁신 촉진
목표10. 불평등 완화	국가간, 국가내 불평등 감소
목표11. 지속가능 도시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간 정주 형성
목표12.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 보장
목표13.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와 영향 저감을 위한 긴급한 실천
목표14. 해양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자원 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15.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숲 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양훼손 방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훼손의 방지
목표16. 평화, 정의,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진,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17.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활성화

*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2) 2016-2036 유엔 해비타트 III 新도시의제

<표 3-2>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

주제 분야	도시의제
I. 사회융합과 형평성	1. 포용도시(빈곤층, 사회취약계층 참여보장)
	2. 이주민과 난민
	3. 안전도시
	4. 문화유산
II. 도시운영체제	5. 법제도
	6. 거버넌스
	7. 재정
III. 공간개발	8. 도시계획/디자인
	9. 토지이용
	10. 도농연계
	11. 공공 공간
IV. 도시경제	12. 지역경제개발
	13. 일자리와 생계
	14. 비공식 경제
V. 도시생태와 환경	15. 복원력
	16. 도시생태계와 자원관리
	17. 기후변화 및 재해 위기관리
VI. 주거와 기초서비스	18. 기반시설과 기초서비스
	19. 교통
	20. 주거
	21. 스마트도시(IT기반 첨단도시)
	22. 비공식 거주

* 출처: UN Habitat III Issue Papers, May 2015.

3) 2011-2020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표 3-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목표	주요내용
목표1. 인식제고	생물다양성 가치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목표2. 국가계획 연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개발 전략과 계획과정 에 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목표3. 유해 인센티브	유해 인센티브 폐지 및 단계적 개선,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
목표4.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를 통해 생태적 한계내로 자연자원 이용
목표5. 서식지	삼림 등 자연서식지 손실 저감
목표6. 어업	어류, 수생식물에 대한 남획 방지, 복원, 관리와 생태적 한계 내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목표7. 농업/양식업/임업	생물다양성이 보존되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
목표8. 오염저감	과영양화 등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
목표9. 외래종	외래종 관리, 제거 및 유입경로 관리 방안 마련
목표10.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또는 해양산성화로 인한 산호초 및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1. 보호지역	육상 및 해양지역의 보호지역 확대, 중요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지역의 보존, 관리
목표12.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보호, 복원, 관리
목표13. 유전적 다양성	문화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생물종, 재배작물 및 가축, 기타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 및 보호
목표14. 생태계 서비스	담수 등 생존에 필수적이고, 건강 및 생계, 복지에 기여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복원
목표15. 생태계 복원	황폐해진 생태계 복원, 보호 를 통한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사막화 방지 기여
목표16.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 및 국가 법체계 편입
목표17.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 수립 및 이행
목표18. 전통지식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및 관행 존중,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
목표19. 과학기술	지식 및 과학기술기반의 개선, 공유, 이전
목표20. 자원	자원 확충

* 출처: Convention on Biodiversity,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4)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

<표 3-4> 50개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 추출 현황

	분야	핵심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신도시의제	아이치목표
1	경제 (9)	에너지	SG7	UG12/UG17/UG19/UG21	
2		생산/소비	SG12	UG10/UG12/UG16/UG19 /UG21	IG4
3		산업혁신	SG9	UG3/UG4/UG8/UG10/UG1 1/UG12/UG14/UG15/UG15 /UG19/UG21	
4		농업	SG2	UG10/UG12	IG7
5		어업	SG14		IG6
6		양식업/임업	SG14/SG15		IG7
7		지역경제		UG12	
8		비공식경제		UG14	
9		노동/고용	SG8	UG13	
10	사회 (21)	빈곤	SG1	UG1/UG13/UG14/UG15 /UG20	
11		영양	SG2	UG10/UG12/UG18/UG21	
12		건강/의료	SG3	UG11/UG16/UG18/UG21	
13		주거		UG20	
14		비공식거주		UG22	
15		이주민/난민	SG8/SG10/SG16	UG2	
16		안전	SG11	UG3	
17		청소년	SG4/SG8/SG10/SG16	UG1	
18		노인	SG4/SG10	UG1	
19		성평등	SG5	UG1	
20		교육	SG4	UG13/UG18/UG21	IG1
21		물/위생	SG6	UG16/UG18	IG14
22		문화유산	SG11	UG4	
23		도시계획	SG11	UG8	
24		기반시설	SG9	UG18	
25		교통	SG11	UG19	
26		토지이용	SG1/SG5/SG11/SG13/SG15	UG9	
27		도농연계	SG2/SG10/SG11/SG8/SG9 /SG12	UG10	
28		공공공간	SG3/SG10/SG11/SG9	UG11	
29		복원력	SG1/SG11/SG9/SG13	UG15	
30		불평등개선	SG10	UG1/UG2/UG5/UG6/UG10 /UG11/UG13/UG14	

No	분야	핵심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신도시의제	아이치목표
31	환경 (11)	기후변화	SG13	UG3/UG9/UG15/UG17 /UG19/UG21	IG10
32		해양생태계	SG14	UG9/UG16	IG10
33		육지생태계	SG15	UG9/UG16	IG14
34		자연서식지	SG15		IG5
35		보호구역	SG15		IG11
36		생태계복원	SG15	UG16	IG15
37		생물다양성	SG15	UG16	IG13
38		멸종위기종	SG15		IG12
39		외래종	SG15		IG9
40		생태계서비스	SG15	UG16	IG14
41		오염저감	SG6	UG16	IG8
42	거버 넌스 / 이행 수단 (9)	개발계획통합	SG17		IG2
43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IG17
44		인센티브			IG3
45		시민참여	SG16	UG6	
46		법제도	SG16	UG5	
47		사법정의	SG16		
48		과학기술	SG17	UG21	IG19
49		전통지식			IG18
50		재원	SG17	UG7	IG20

※ 중복 및 같은 맥락의 용어는 통합, 국제/국가 관련 용어 제외.

5)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별 실천사업 내용 범위

<표 3-5>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별 지역 실천사업 내용 범위

No	분야	핵심어	지역 실천사업 내용 범위
1	경제 (9)	에너지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절약
2		생산/소비	자원 재활용 정책, 생활협동조합 활동
3		산업혁신	친환경 기업 육성/지원 정책,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정책, 신산업
4		농업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 농업 기술, 농업 상품, 농업 관련 신산업, 귀농
5		어업	친환경어업, 수산물 유통, 어업 기술, 어업 상품, 어업 관련 신산업, 귀농
6		양식업/임업	친환경임업/양식업, 유통, 기술, 상품, 임업/양식업 관련 신산업, 귀농
7		지역경제	지역 자립 경제, 지역 화폐
8		비공식경제	포장마차, 거리좌판 등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업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등
9		노동/고용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 정규직, 노동조합
10	사회 (21)	빈곤	저소득층 지원, 노숙자
11		영양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친환경먹거리
12		건강/의료	보건소, 운동, 생활체육 지원 및 시설 마련, 전염병 예방
13		주거	세입자문제, 주택공급, 부동산시장, 토지점유권
14		비공식거주	쪽방촌, 비닐하우스촌, 불법거주
15		이주민/난민	다문화 정책, 이주노동자, 인권
16		안전	치안/범죄, 자연재난, 소방재난, 이웃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사회신뢰)
17		청소년	청소년 인권, 아동 가정폭력 예방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18		노인	노인 일자리, 인권, 복지,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19		성평등	여성인권, 성폭력, 성소수자, 여성 및 성소수자 관련 지원 및 정책
20		교육	학교 및 평생교육, 일반적인 교육 관련 활동
21		물/위생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정책
22		문화유산	역사유산 및 문화재 보호, 문화 예술, 인문사회 관련 공동체 운동
23		도시계획	마을 만들기 및 도시 비전, 도시종합 계획 등
24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택공급, 의료시설, 교육/문화 시설 등 시설 공급 및 관리(하드웨어 개념)
25		교통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도로 관련 정책 및 교육
26		토지이용	주택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교통용지, 기타 등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지정, 규제 등
27	도농연계	도시농촌 교류 사업, 유통 시스템 연계, 생활권 연계 등(예: 농촌교육농장, 생산소비자 협동조합, 농촌 홈스테이 및 체험, 도농연계 시장 등)	

	분야	핵심어	지역 실천사업 내용 범위
28	사회 (21)	공공공간	모든 시민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 공간으로 공원, 도로, 광장, 해변,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조성/관리/이용에 관련된 사항
29		복원력	재난, 재해에 의한 도시 기반 시설 및 사회 구성원간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시스템
30		불평등개선	사회적 약자(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여성, 빈민)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일반 제도적 측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또는 격차 개선(소득, 사회적 대우 등)을 위한 활동
31	환경 (11)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대응 및 적응
32		해양생태계	바다, 해양 자원(식량자원, 광물자원), 보호보전 오염저감
33		육지생태계	산, 들, 강의 자원(식량 및 광물자원)의 보호보전 오염저감
34		자연서식지	동식물 서식지 보전, 보호, 보건(장소 개념)
35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설정(장소적 개념)
36		생태계복원	동식물종 복원, 하천살리기 운동 등 훼손된 동식물종 및 자연환경 되살리기
37		생물다양성	동식물종 다양성 확보
38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
39		외래종	외부에서 진입한 동식물종 관련 관리정책 및 토착종 보호
40		생태계서비스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주는 서비스: 도시텃밭, 공원조성, 일반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생태관광
41		오염저감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관련 저감 활동
42	거버넌스 / 이행 수단 (9)	개발계획통합	정부의 환경과 경제개발 계획 통합
43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및 이행
44		인센티브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제도(예: 금융 지원, 면세, 감세, 벌금, 부과세 등)
45		시민참여	자발적 및 주체적 참여(단순 행사 참여 제외)
46		법제도	법 제정,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연구, 법제화 작업, 사회적/문화적 제도화를 위한 각종 활동(정책 포럼, 간담회, 토론회, 조례 제정 등)
47		사법정의	소송에 대한 접근성(변호사 선임, 절차의 용이성), 시민 배심원 제도 등
48		과학기술	과학기술, 학계, 연구개발 등 재정 및 정책 지원
49		전통지식	전통지식 계승, 보호, 이용, 관리 등에 관련한 정책, 활동
50		재원	세수 개발, 세금 징수율 증대, 금융 등

3.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1) 국제 이행목표 키워드로 본 지역 CSD 실천사업의 특징

- **풀뿌리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통로 역할** : 전체 활동의 50%가 교육 및 거버넌스 관련 활동
 - 24개 조사 대상 지역의 2011-2015년 실천사업들의 상위 3개 키워드 선정 결과, 사회분야의 ‘교육’, 거버넌스/이행수단 분야의 ‘시민참여’, ‘법제도’ 활동이 전체 활동의 50%로 압도적 다수 차지.
 - ‘교육’은 주로 강사양성,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강의, 워크숍 및 캠페인 등 교육적 활동이 다수를 이루며, ‘시민참여’는 공모실천사업,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활동 등, ‘법제도’는 정책포럼/토론회 등이 포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풀뿌리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통로 확대 역할 및 기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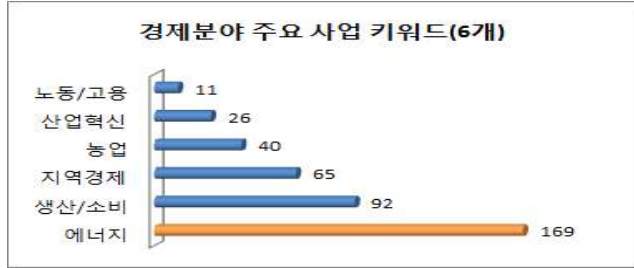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장(場)** : 전체 활동의 29%가 교육 활동
 - ‘교육(훈련)’ 활동이 총 1,421회로,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한 ‘법제도(정책포럼/토론회 등)’ 보다 약 3배 많아,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주로, 기후변화, 도시환경문제 관련 강사양성, 청소년교육, 워크숍 및 캠페인 등 교육적 활동으로, 비공식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장(場)으로써의 역할이 가장 활발.

- **환경이슈의 주류화 여전, 한편, 공동체 생활 등 사회이슈로의 점진적인 확장**
 - 방법적 성격이 강한 ‘교육’, ‘시민참여’, ‘법제도’ 키워드를 제외하고, 내용적 키워드 분포를 보면, 환경분야 이슈가 전체 활동의 22%를 차지해,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환경분야 편중이 여전.
 - 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국내의 역사적 배경과 국내 행정 담당 체계에 따른 사업 범위의 한계가 가장 큰 요인.
 - 한편, 상위 10개 실천사업 활동 중 환경분야에 이어, 사회분야의 ‘문화유산’, ‘도시계획’, ‘교통’ 등 공동체 자치 또는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회이슈로의 점진적인 확장 조짐이 나타나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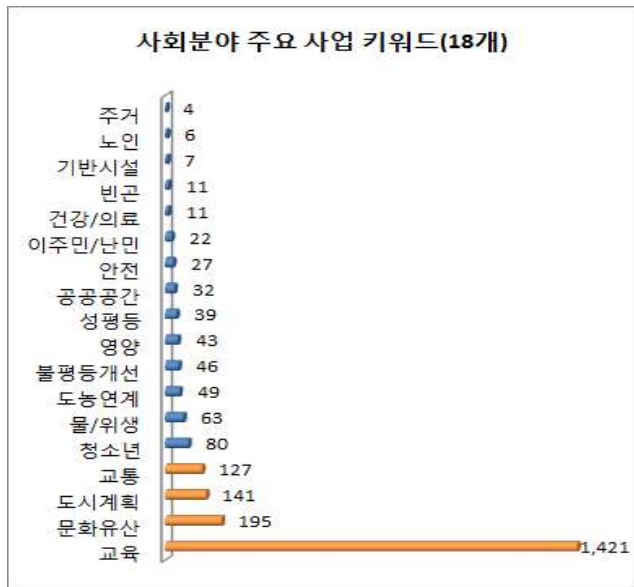
<표 3-6> 분야별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분야	핵심어	총계(개)
경제 (6/9)	소계	403
	에너지	169
	생산/소비	92
	지역경제	65
	농업	40
	산업혁신	26
	노동/고용	11
사회 (18/21)	소계	2,324
	교육	1,421
	문화유산	195
	도시계획	141
	교통	127
	청소년	80
	물/위생	63
	도농연계	49
	불평등개선	46
	영양	43
	성평등	39
	공공공간	32
	안전	27
	이주민/난민	22
	건강/의료	11
	빈곤	11
	기반시설	7
	노인	6
주거	4	
환경 (11/11)	소계	1,096
	기후변화	434
	생태계서비스	361
	생물다양성	86
	오염저감	79
	해양생태계	40
	육지생태계	34
	자연서식지	28
	생태계복원	13
	외래종	12
	보호구역	7
멸종위기종	2	
거버넌스/ 이행수단 (4/9)	소계	1,111
	법제도	553
	시민참여	546
	과학기술	8
	전통지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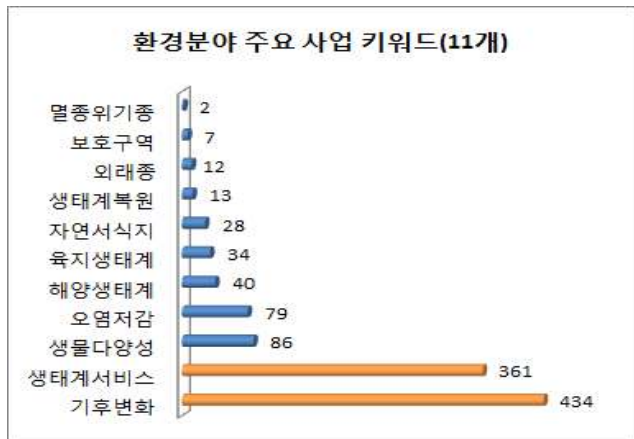
<그림 3-1> 경제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그림 3-2> 사회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그림 3-3> 환경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그림 3-4> 거버넌스/이행수단 분야 실천사업 키워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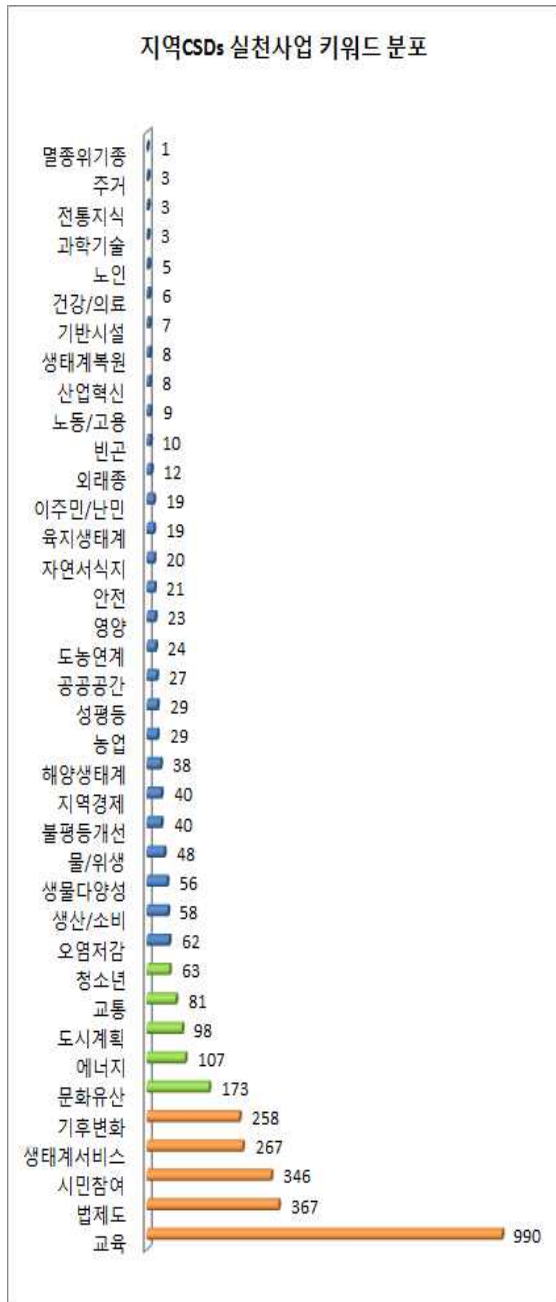
□ 광역과 기초 지역간 주요 활동내용 대동소이

- 7개 광역CSDs와 17개 기초CSDs의 상위 5개 주요 활동 키워드를 보면, ‘교육’, ‘법제도’, ‘시민참여’, ‘기후변화’, ‘생태계서비스’ 등 약간의 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 다만, 상위 10개 키워드 분포를 보면, 광역의 경우, ‘생산/소비’, ‘생물다양성’, 기초지역의 경우, ‘문화유산(정체성)’, ‘청소년’ 관련 활동에 보다 주력한 차이가 나타남.
- 한편, 광역차원에서는 ‘기반시설’, ‘외래종’, 기초차원에서는 ‘보호구역’ 관련 활동이 부재.

<그림 3-5> 광역CSDs 실천사업 키워드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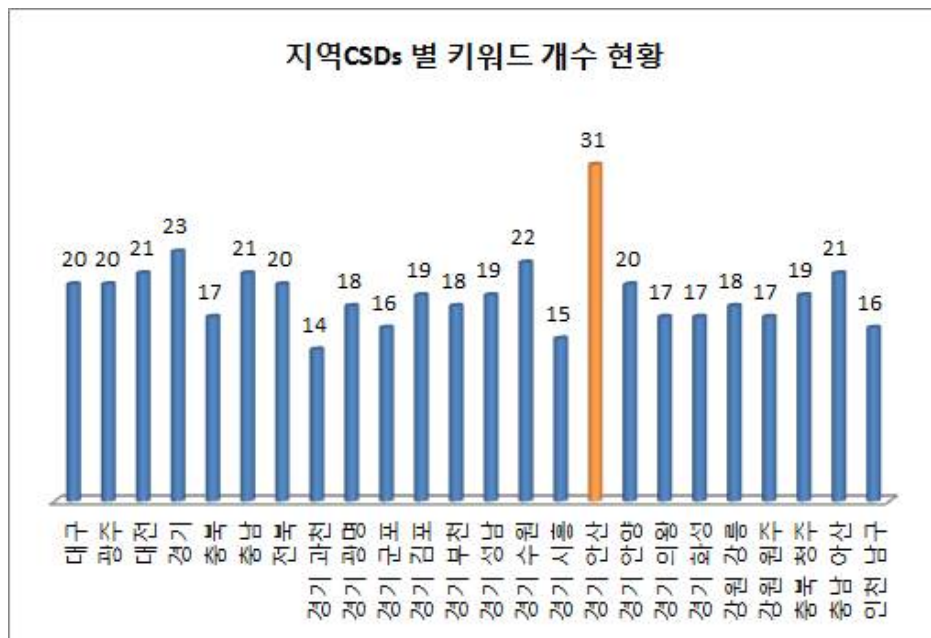
<그림 3-6> 기초CSDs 실천사업 키워드 분포현황



□ 국제 이행목표 기준 실천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적은 편 : 전체의 38% 불과

- 총 50개의 키워드 중 각 지역별로 평균 19개 키워드 관련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전체의 38% 정도의 키워드만 나타나, 국제 이행목표 기준 24개 조사대상 지역CSD의 실천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 각 지역별 현황을 보면, 안산이 31개 분야 활동을 전개해, 사업종류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과천의 경우, 14개 분야에 그쳐, 다루는 사업종류가 가장 제한적.

<그림 3-7> 지역CSDs 별 키워드 개수 현황(사업종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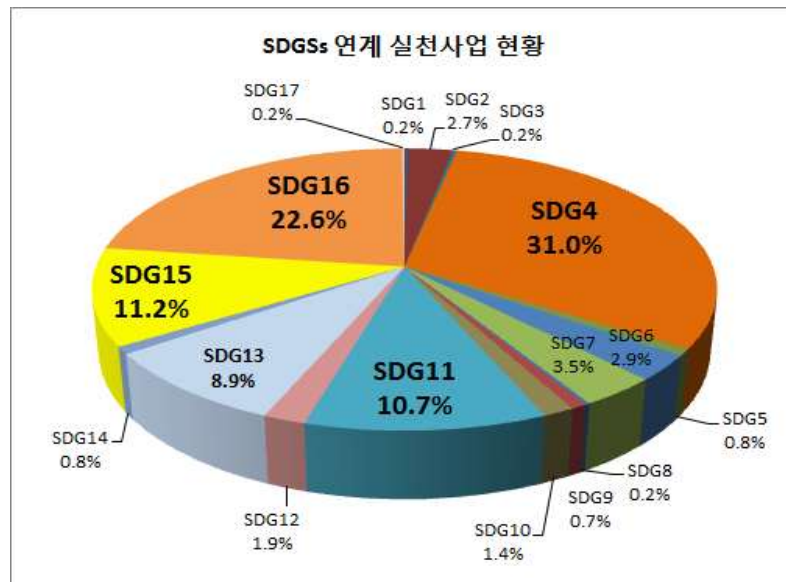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4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 가장 활발 : 교육, 평화/정의/제도, 육지생태계, 도시
 - 24개 조사 대상 지역의 2011-2015년간 실천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총 17개 목표와 관련된 활동들이 모두 분포.
 -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4(교육) 관련 활동이 전체의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SDG16(평화, 정의, 제도) 22.6%, SDG15(육지생태계) 11.2%, SDG11(도시) 10.7% 등 총 4개 목표 관련 활동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

- 경제, 사회, 이행수단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 취약 : 빈곤, 건강/복지, 성평등, 일자리, 산업, 이행수단
 - SDG1(빈곤), SDG3(건강과 복지), SDG5(양성평등), SDG8(일자리와 경제성장), SDG9(산업, 혁신, 인프라), SDG17(파트너십) 6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CSD 전체 활동의 1% 미만으로 상당히 취약한 편.
 - 특히, 빈곤과 건강복지 관련 활동은 6곳⁶⁾에 불과.
 - 또한, SDG17 목표의 핵심 내용인 자원확보 및 모니터링/평가체계 관련 활동은 전문한 상황.
 - 기본생계와 인권, 그리고 안정적 재원 및 평가의 제도화 등 근본적인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축 활동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 방안 강구 필요.

<그림 3-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2011-2015 실천사업 현황



6) (SDG 1 빈곤) 충남, 안산, 원주, 인천 남구 / (SDG 3 건강과 복지) 대구, 광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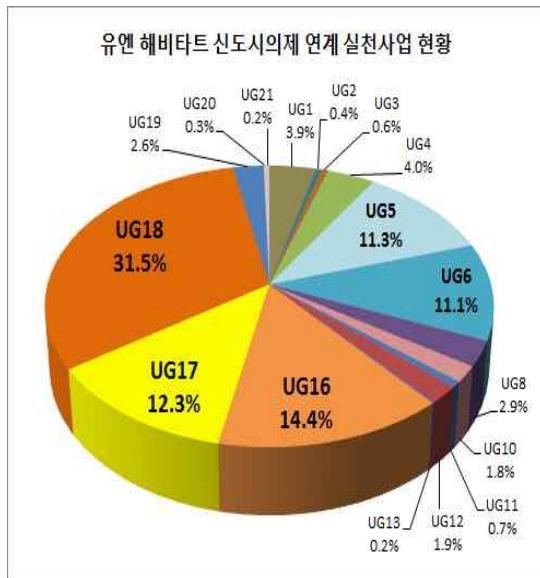
<표 3-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SDGs	빈도수	핵심어(사업분야)	비고
SDG 1 빈곤	11	빈곤	빈민가 찾아가는 문화/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SDG 2 기아해소와 농업	132	농업, 도농연계, 영양	도시텃밭, 건강한 먹거리, 직거래장터 등
SDG 3 건강과 복지	11	건강/의료	아토피포럼, 유해물질 관리 등
SDG 4 교육	1,507	교육, 노인, 청소년	강사양성,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현장답사/탐사, 워크숍 및 캠페인 등
SDG 5 양성평등	39	성평등	성평등포럼, 여성문화제 등
SDG 6 물과 위생	142	물/위생, 오염저감	EM만들기 등
SDG 7 에너지	169	에너지	에너지진단, 햇빛발전소 등
SDG 8 일자리와 경제성장	11	노동/고용	공단 작업장 내 문화복지서비스, 노동지표 등 노동복지 활동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33	기반시설, 산업혁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SDG 10 불평등 개선	68	불평등개선, 이주민/난민	취약계층 복지지원, 다문화 프로그램 등
SDG 11 도시	522	공공공간, 교통, 도시계획, 문화유산, 안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을만들기, 역사문화기행 등
SDG 12 소비와 생산	92	생산/소비	재활용장터 등 자원순환관련 활동
SDG 13 기후변화	434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
SDG 14 해양생태계	40	해양생태계	바다갯벌, 연안 생태계 보호 등
SDG 15 육지생태계	543	멸종위기종, 보호구역, 생물다양성, 생태계복원, 생태계서비스, 외래종, 육지생태계, 자연서식지	하천살리기, 도심 생물다양성 조사/보호, 녹지공간 보존, 하천길/숲길 걷기 등
SDG 16 평화, 정의, 제도	1,099	법제도, 시민참여	의제 및 지표개발, 조례제정, 시민공모사업, 모니터링, 정책포럼/토론회, 네트워크 등
SDG 17 파트너십	8	과학기술	적정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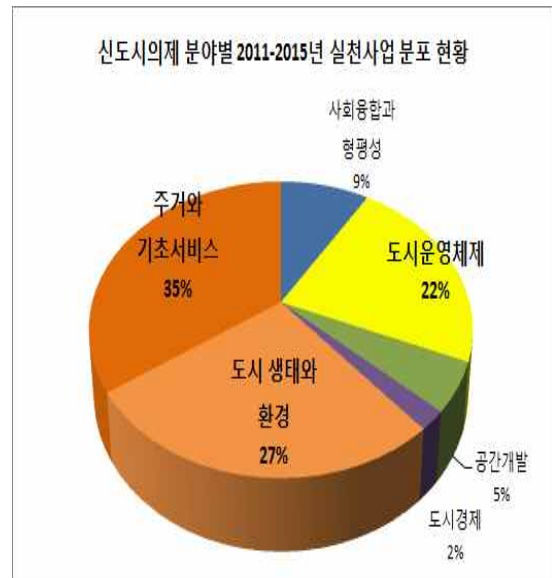
3) 유엔해비타트 신도시의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5개 도시의제 활동 가장 활발 : 기초서비스(교육), 도시생태환경, 기후변화, 법제도, 거버넌스
 - 24개 조사 대상 지역의 2011-2015년간 실천사업들을 <유엔 해비타트 신도시의제>와 연계한 결과, 총 22개 의제 중 17개 의제 관련 활동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
 - 17개 의제 중 사회분야의 UG18(기초서비스-교육, 영양, 물/위생, 건강/의료, 기반시설) 31.5%, 환경분야의 UG16(도시생태)와 UG17(기후변화) 의제가 각각 14.4%, 12.3%, 거버넌스 분야의 UG5(법제도), UG6(거버넌스)가 각각 11.3%, 11.1%를 차지하는 등 5개 의제 활동이 가장 활발.
- 사회융합 및 형평성, 도시경제, 도시공간계획, 지방재정 분야 의제 활동 취약
 - 인권(UG1), 이주민(UG2), 안전(UG3), 도시문화유산(UG4) 등 공동체 융합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함과 동시에, 주거권(UG20, UG22), 비공식 경제(노점상 등)(UG14) 등 사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부재한 상황.
 - 또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을 전개한 지역은 8곳7), 노동자 인권 및 복지 관련 활동을 추진한 지역은 6곳8)에 불과하고, 사업수도 미미.
 -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연계 등 도시 공간 계획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 의제는 부재.
 - 도시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 재원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나, 2014년 기준 24개 조사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약 37%로 상당히 낮은 수준. 그럼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민은 전무.

<그림 3-9> 유엔 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그림 3-10> 신도시의제 6개 분야별 2011-2015년 실천사업 분포 현황



7)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군포, 수원, 안산

8) 경기, 광명, 안산, 의왕, 아산, 인천남구

<표 3-8> 유엔해비타트 신도시의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분야	신도시의제	빈도수	핵심어	비고
사회융합 과 형평성	UG1 포용도시	193	노인, 성평등, 불평등개선, 청소년	여성친화적도시지표, 청소년교육, 유니버설디자인 등
	UG2 이주민/난민	22	이주민/난민	다문화 정책 및 지원 활동 등
	UG3 안전도시	27	안전	세월호 관련 활동, 안심귀가 서비스, 마을방범자치 등
	UG4 문화유산	195	문화유산	책문화축제, 한도시 한책읽기, 인문학강좌 등
도시 운영체제	UG5 법제도	553	법제도	의제 및 지표개발, 조례제정, 정책포럼/토론회 등
	UG6 거버넌스	546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 등
	UG7 재정	-	재정	-
공간개발	UG8 도시계획/디자인	141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등
	UG9 토지이용	-	토지이용	-
	UG10 도농연계	89	농업, 도농연계	지역먹거리, 도시농업, 직거래장터 등
	UG11 공공공간	32	공공공간	도시공원, 골목디자인, 주차장 조성 등
도시경제	UG12 지역경제개발	91	산업혁신,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UG13 일자리와 생계	11	노동/고용	공단 작업장 내 문화복지서비스, 노동지표 등 노동복지 활동
	UG14 비공식 경제	-	비공식경제	-
도시생태 와 환경	UG15 복원력	-	복원력	-
	UG16 도시생태계와 자원관리	705	생태계복원, 육지생태계, 해양생태계, 오염저감, 생물다양성, 생산/소비, 생태계서비스	쓰레기 재활용, 하천살리기, 도심 생물다양성 조사/보호, 녹지공간 보존, 하천길/숲길 걷기 등
	UG17 기후변화와 재해 위기관리	603	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햇빛발전소, 온실가스 저감 등
주거 와 기초 서비스	UG18 기반시설과 기초서비스	1,545	기반시설, 건강/의료, 영양, 물/위생, 교육	각종 청소년, 성인대상 교육 활동, 건강한 먹거리, 유해물질 관리, 공공시설 실태조사 등
	UG19 교통	127	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UG20 주거	15	주거, 빈곤	사회주택, 일반주거지역 복지 등
	UG21 스마트도시	8	과학기술	적정기술
	UG22 비공식 주거	-	비공식거주	-

4)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 인식제고(교육), 기후변화대응, 생태계서비스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

- 24개 조사 대상 지역의 2011-2015년간 실천사업들을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와 연계한 결과, 총 20개 아이치목표 중에서 14개 아이치목표 관련 활동들이 추진.
- 14개 아이치목표 중 아이치목표 1(인식제고) 관련 활동이 52.2%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아이치목표 10(기후변화대응), 아이치목표 14(생태계서비스)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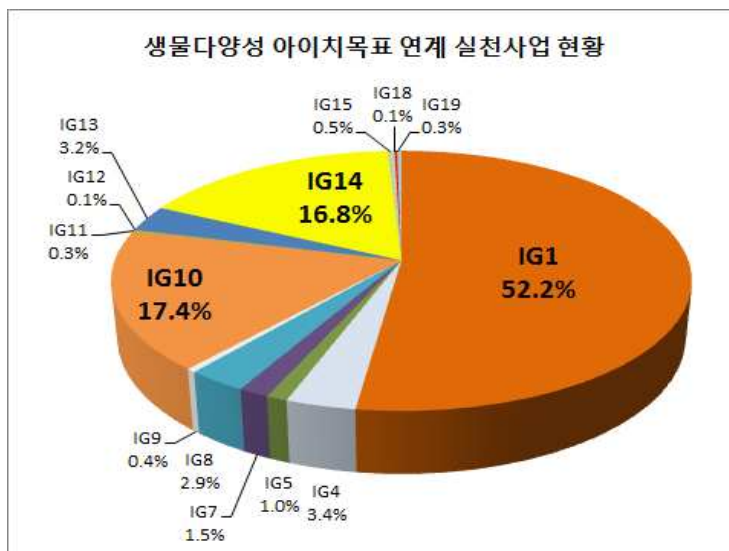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 활동 부재 :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심

- 24개 조사지역에서 개발계획 통합(IG2), 인센티브 정책(IG3),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IG17),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재원확충(IG20) 등 제도 구축 관련 활동 부재.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의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기구의 핵심 실천과제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정부의 정치·정책적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한 정책이슈화 활동 노력 필요.

□ 전통적 환경보호관리 중심 활동 → 지역내 생태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중심 활동으로 전환 필요

-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분배문제가 중요한 환경경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지역주민의 생계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지역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역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또한,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생태계(사회적 가치)와 상품으로서의 생태계(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담론 형성 필요.

<그림 3-11> 생물다양성 아이치목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표 3-9> 생물다양성 아이치(Ichi) 목표 연계 2011-2015년 실천사업 현황

아이치	빈도수	핵심어	비고
IG1 인식제고	1,421	교육	환경지도자 양성, 청소년 교육, 환경의날 행사 등
IG2 국가계획 연계	-	개발계획통합	환경과 경제개발계획 통합
IG3 유해 인센티브	-	인센티브	금융지원, 면세, 감세, 벌금 등
IG4 이해관계자 참여	92	생산/소비	자원 재활용 등
IG5 서식지	28	자연서식지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IG6 어업	-	어업	친환경어업, 수산물유통 등
IG7 농업/양식업/임업	40	농업	친환경농업, 직거래장터 등
IG8 오염저감	79	오염저감	EM 홍보 및 배포, 대기오염 조사 등
IG9 외래종	12	외래종	외래종 모니터링 및 제거 활동 등
IG10 기후변화대응	474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저감 활동
IG11 보호지역	7	보호구역	DMZ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IG12 멸종위기종	2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IG13 유전적 다양성	86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보호 등
IG14 생태계서비스	458	육지생태계, 물/위생, 생태계서비스	도시텃밭, 숲길 걷기, 수변공간 공원 조성, 생태관광 등
IG15 생태계복원	13	생태계복원	문학산 복원, 안양천살리기 등
IG16 나고야의정서	-	-	의정서 발효 관련 국제 의제로서, 지역의제로는 해당사항 없음.
IG17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IG18 전통지식	4	전통지식	적정기술 보급, 전통지혜배우기 등
IG19 과학기술	8	과학기술	적정기술 개발, 지원 등
IG20 자원	-	자원	세수개발, 세금징수강화, 금융 등

4. 종합정리

<표 3-10>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분야	No	핵심어	SDGs	신도시의제	아이치	빈도 총계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제	1	농업	SG2	UG10	IG7	40	1	-	2	-	1	1	6
	2	에너지	SG7	UG17	-	169	24	-	6	9	1	3	19
	3	노동/고용	SG8	UG13	-	11	-	-	-	2	-	-	-
	4	산업혁신	SG9	UG12	-	26	1	4	-	-	3	2	8
	5	생산/소비	SG12	UG16	IG4	92	5	18	5	-	-	3	3
	6	지역경제	-	UG12	-	65	3	1	2	10	8	-	1
사회	7	빈곤	SG1	UG20	-	11	-	-	-	-	-	1	-
	8	도농연계	SG2	UG10	-	49	1	-	3	7	6	3	5
	9	영양	SG2	UG18	-	43	-	17	1	-	-	-	2
	10	건강/의료	SG3	UG18	-	11	5	-	-	-	-	-	-
	11	노인	SG4	UG1	-	6	-	1	-	-	-	-	-
	12	청소년	SG4	UG1	-	80	-	2	2	2	1	-	10
	13	교육	SG4	UG18	IG1	1,421	105	85	72	60	23	35	51
	14	성평등	SG5	UG1	-	39	-	6	2	1	-	-	1
	15	물/위생	SG6	UG18	IG14	63	11	-	-	2	-	2	-
	16	기반시설	SG9	UG18	-	7	-	-	-	-	-	-	-
	17	불평등개선	SG10	UG1	-	46	-	-	2	4	-	-	-
	18	이주민/난민	SG10	UG2	-	22	-	-	1	2	-	-	-
	19	공공공간	SG11	UG11	-	32	-	1	-	4	-	-	-
	20	교통	SG11	UG19	-	127	23	13	8	1	-	-	1
	21	안전	SG11	UG3	-	27	-	6	-	-	-	-	-
	22	문화유산	SG11	UG4	-	195	-	5	8	6	2	-	1
	23	도시계획	SG11	UG8	-	141	3	14	3	17	6	-	-
	24	주거	-	UG20	-	4	-	-	-	-	-	1	-

분야	No	핵심어	SDGs	신도시 의제	아이치	경기 과천	경기 광명	경기 군포	경기 김포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의왕	경기 화성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충남 아산	충북 청주	인천 남구
경제	1	농업	SG2	UG10	IG7	-	-	-	1	-	2	4	-	5	1	3	3	3		4	2	1
	2	에너지	SG7	UG17	-	3	3	1	1	8	5	7	10	23	11	6	3	4	5	17	-	-
	3	노동/고용	SG8	UG13	-	-	1	-	-	-	-	-	-	2	-	3	-	-	-	1	-	2
	4	산업혁신	SG9	UG12	-	-	-	2	-	-	-	3	-	3	-	-	-	-	-	-	-	-
	5	생산/소비	SG12	UG16	IG4	4	-	-	1	-	-	5	3	4	-	6	-	16	3	11	2	3
	6	지역경제	-	UG12	-	-	-	-	1	10	1	9	-	3	-	-	1	1	-	3	9	2
사회	7	빈곤	SG1	UG20	-	-	-	-	-	-	-	-	-	3	-	-	-	-	4	-	-	3
	8	도농연계	SG2	UG10	-	-	-	-	1	2	2	3	-	-	-	-	2	2	-	4	8	-
	9	영양	SG2	UG18	-	1	-	1	4	-	1	-	-	1	-	-	11	3	-	1	-	-
	10	건강/의료	SG3	UG18	-	-	6	-	-	-	-	-	-	-	-	-	-	-	-	-	-	-
	11	노인	SG4	UG1	-	-	-	-	1	-	-	-	-	4	-	-	-	-	-	-	-	-
	12	청소년	SG4	UG1	-	-	3	4	8	11	3	6	2	13	11	1	-	-	-	1	-	-
	13	교육	SG4	UG18	IG1	39	74	60	39	28	26	44	52	156	70	56	110	70	44	74	27	21
	14	성평등	SG5	UG1	-	-	-	-	-	-	-	4	-	13	4	5	1	1	1	-	-	-
	15	물/위생	SG6	UG18	IG14	2	-	-	-	2	2	1	8	1	1	10	9	4	4	2	2	-
	16	기반시설	SG9	UG18	-	-	-	-	-	-	-	-	-	6	-	-	-	-	1	-	-	-
	17	불평등개선	SG10	UG1	-	-	4	2	-	4	1	1	-	5	3	-	-	-	-	12	1	7
	18	이주민/난민	SG10	UG2	-	-	-	1	-	-	-	5	-	6	3	1	-	-	-	3	-	-
	19	공공공간	SG11	UG11	-	-	1	-	-	1	1	4	1	5	4	-	-	-	1	-	2	7
	20	교통	SG11	UG19	-	12	2	8	3	-	-	10	5	13	2	3	5	5	6	-	5	2
	21	안전	SG11	UG3	-	-	-	-	-	-	3	-	-	15	-	-	-	-	-	-	3	-
	22	문화유산	SG11	UG4	-	-	7	12	7	2	7	9	2	58	11	6	16	2	4	5	6	19
	23	도시계획	SG11	UG8	-	1	6	11	4	15	9	3	-	7	11	-	17	-	1	-	9	4
	24	주거	-	UG20	-	-	-	-	-	-	-	-	-	-	3	-	-	-	-	-	-	-

III.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 이행목표와 지역 CSD 실천사업 현황

분야	No	핵심어	SDGs	신도시의제	아이치	빈도 총계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환경	25	오염저감	SG6	UG16	IG8	79	6	8	3	-	-	-	-
	26	기후변화	SG13	UG17	IG10	434	61	16	27	16	7	27	22
	27	해양생태계	SG14	UG16	IG10	40	-	-	-	-	-	1	1
	28	생물다양성	SG15	UG16	IG13	86	2	3	1	12	3	2	7
	29	생태계서비스	SG15	UG16	IG14	361	8	27	24	2	15	9	9
	30	육지생태계	SG15	UG16	IG14	34	5	2	-	-	4	3	1
	31	생태계복원	SG15	UG16	IG15	13	1	-	-	-	2	2	-
	32	보호구역	SG15	-	IG11	7	-	-	-	2	2	1	2
	33	멸종위기종	SG15	-	IG12	2	-	-	-	-	-	1	-
	34	자연서식지	SG15	-	IG5	28	-	-	1	4	-	3	-
35	외래종	SG15	-	IG9	12	-	-	-	-	-	-	-	
거버 넌스/ 이행 수단	36	법제도	SG16	UG5	-	553	29	45	11	29	26	10	36
	37	시민참여	SG16	UG6	-	546	57	45	33	14	19	15	17
	38	과학기술	SG17	UG21	IG19	8	1	-	-	1	-	3	-
	39	전통지식	-	-	IG18	4	-	-	-	1	-	-	-

분야	No	핵심어	SDGs	신도시 의제	아이치	경기 과천	경기 광명	경기 군포	경기 김포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의왕	경기 화성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충남 아산	충북 청주	인천 남구
환경	25	오염저감	SG6	UG16	IG8	8	-	-	1	7	1	-	8	6	6	11	3	2	4	3	2	-
	26	기후변화	SG13	UG17	IG10	3	18	27	8	6	4	9	12	28	13	24	21	26	24	19	12	4
	27	해양생태계	SG14	UG16	IG10	-	-	-	-	-	-	-	10	14	-	-	-	7	-	7	-	-
	28	생물다양성	SG15	UG16	IG13	-	18	5	3	3	-	9	-	3	2	-	10	2	-	-	1	-
	29	생태계서비스	SG15	UG16	IG14	13	38	12	16	9	15	8	6	34	18	13	27	9	13	22	5	9
	30	육지생태계	SG15	UG16	IG14	1	-	6	2	-	-	-	5	1	-	-	-	-	4	-	-	-
	31	생태계복원	SG15	UG16	IG15	-	1	-	-	4	-	-	-	-	-	-	-	-	-	-	2	1
	32	보호구역	SG15	-	IG11	-	-	-	-	-	-	-	-	-	-	-	-	-	-	-	-	-
	33	멸종위기종	SG15	-	IG12	-	1	-	-	-	-	-	-	-	-	-	-	-	-	-	-	-
	34	자연서식지	SG15	-	IG5	-	-	-	-	1	-	2	-	-	8	-	-	-	-	9	-	-
35	외래종	SG15	-	IG9	5	4	-	-	-	1	-	-	-	-	2	-	-	-	-	-	-	
거버넌스 / 이행수단	36	법제도	SG16	UG5	-	2	9	11	10	47	17	47	12	74	16	10	35	11	11	28	25	2
	37	시민참여	SG16	UG6	-	7	8	11	11	22	8	30	23	54	21	12	37	20	17	25	32	8
	38	과학기술	SG17	UG21	IG19	-	-	-	-	-	-	-	-	-	-	-	-	-	-	3	-	-
	39	전통지식	-	-	IG18	-	-	-	-	-	-	-	-	1	2	-	-	-	-	-	-	-

IV. 지역 CSD 거버넌스 역량 현황

1. 개관

1) 조사연구 목적

- ① 지역 CSD의 거버넌스를 위한 인적 역량(다양성, 활동성) 파악.
- ② 지역 CSD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24개 지역 CSD의 지속가능발전 사회자본(인적 자원) 형성에의 기여도 도출.

2) 조사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통계 조사 및 분석.
- 조사연구는 크게, ① 지역 CSD 인적 자원 다양성 조사와 ② 지역 CSD 인적 자원의 활동성 조사로 구분.

① 24개 지역 CSD 인적 자원 다양성 조사 : 문헌조사(총회자료집)

- 2011~2015년까지 지역 CSD 참여 단체/기관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주요그룹 분류기준과 지역차원의 다양한 참여그룹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합하여 총 17개 그룹으로 분류.

UNCSD 주요그룹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NGO, ④ 지방정부, ⑤ 농민 ⑥ 노동계, ⑦ 산업계, ⑧ 과학기술계 * '원주민'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
지역 특성 반영 추가 분류	⑨ 자치조직(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⑩ 의회, ⑪ 국민운동조직(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⑫ 종교계, ⑬ 문화예술계, ⑭ 언론/미디어, ⑮ 교육계(교육청, 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등), ⑯ 공공서비스기관(공공기관, 사회복지재단 등 정부위탁서비스 기관 등), ⑰ 기타(개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등)

② 24개 지역 CSD 인적 자원의 활동성 조사 : 설문조사

-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 이해정도, 거버넌스 활동 참여정도,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경험정도
- 조사기간 : 2015. 9.23.~2015.10.30.
- 대 상 : 24개 지역 640명 지역 CSD 참여 위원 및 실무자

2.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인적자원 현황

□ 시민단체, 기업/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4개 그룹 참여 활발

- 2011-2015년 총 5개년 동안 24개 지역CSD에 참여한 주요그룹 현황을 보면, 17개 그룹 기준, '시민단체(15%)', '기업/산업계(15%)', '과학기술계(13%)', '지방정부(9%)'의 참여가 가장 활발.
- 유엔 8개 그룹 기준으로 보면, '시민단체(31%)'와 '지방정부(20%)'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

□ 기업/산업계의 높은 참여율에 비해 노동계 참여율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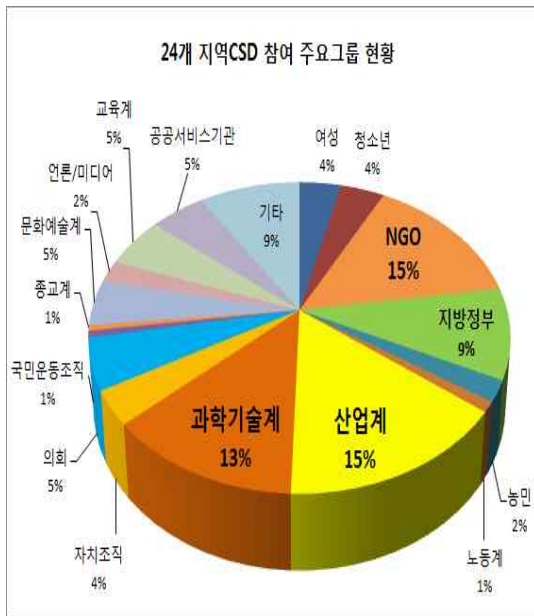
- 2011-2015년 기간 24개 지역 CSD에 참여한 노동계 비율은 전체 그룹 중 1%에 불과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산업계의 15%의 높은 참여율에 비해 참여 비중이 상당히 불균형.
- 또한, 노동계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노동 이슈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LSDGs)로 수립,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내재.

□ 여성계 및 청소년 참여율 저조한 편

- 2011-2015년 기간 24개 지역CSD에 참여한 여성계와 청소년은 각각 4%, 4%로 다른 주요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 이는, 지역CSD의 양성평등, 청소년 관련 활동들이 부족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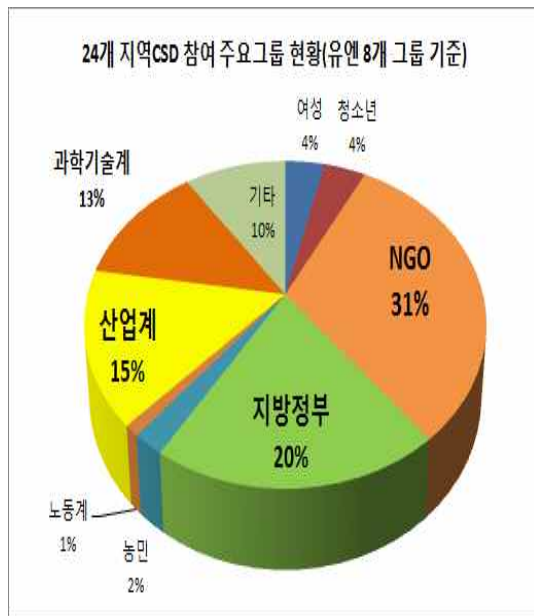
<그림 4-1> 17개 그룹 기준

2011-2015년 24개 지역CSD 참여 주요그룹 현황



<그림 4-2> 유엔 8개 그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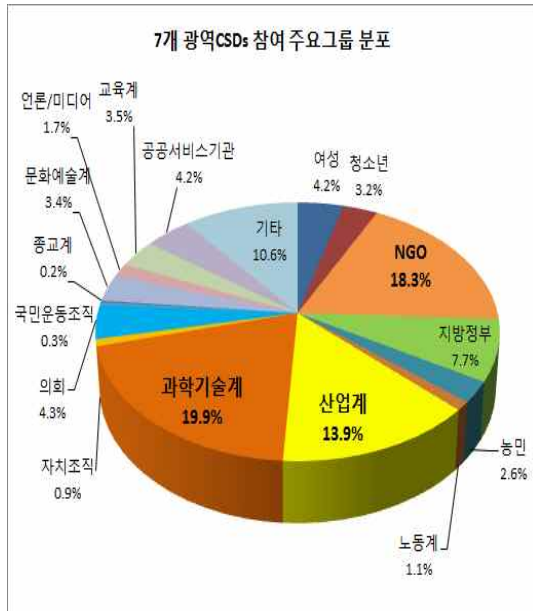
2011-2015년 24개 지역CSD 참여 주요그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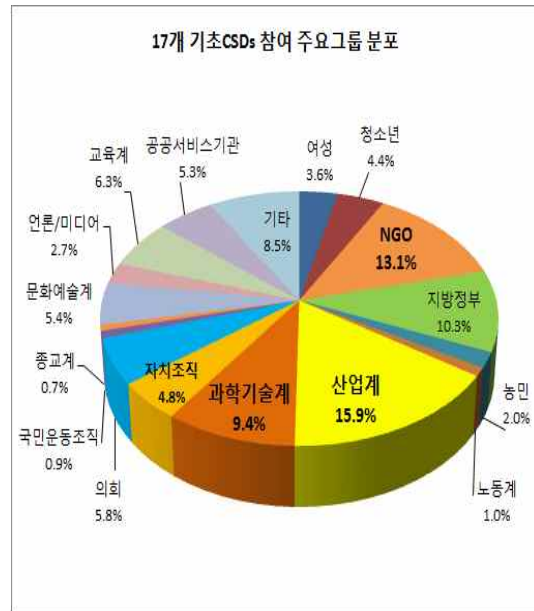
□ 기초단위 지역에서 ‘자치조직’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특징

- 전반적으로 광역CSD와 기초CSD의 주요 참여그룹 분포는 대동소이.
- 다만, 기초CSD의 경우, ‘자치조직’이 4.8%로, 광역CSD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그림 4-3> 7개 광역CSD 참여 주요그룹 분포



<그림 4-4> 17개 기초CSD 참여 주요그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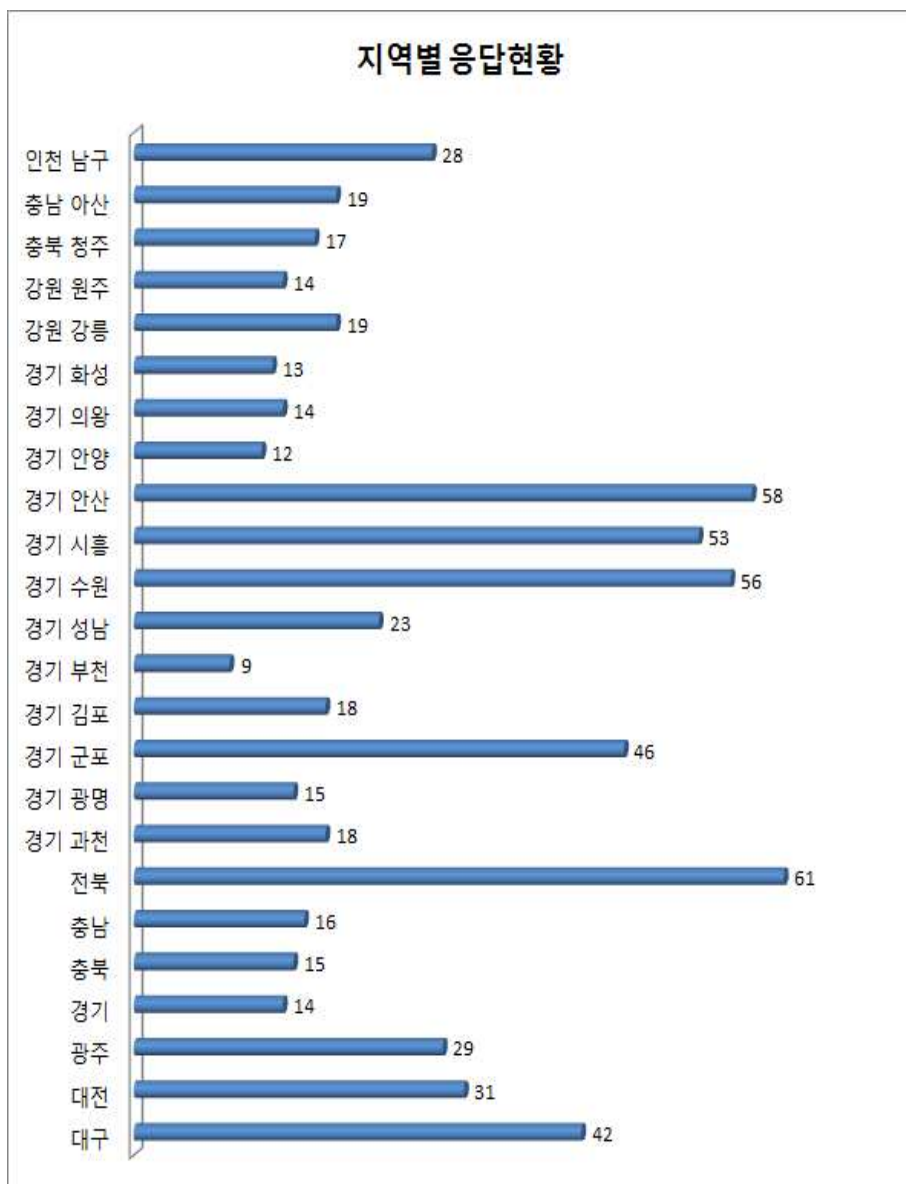


3. 지역 CSD 거버넌스 활동성과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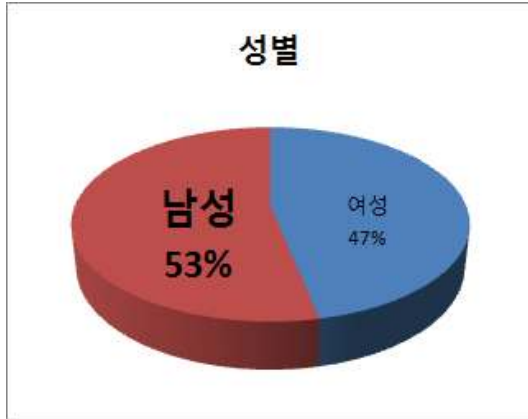
- 설문목적 :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 이해도 및 거버넌스 참여정도 측정
- 조사기간 : 2015.9.23.~2015.10.30.
- 설문대상 : 2015년 24개 지역 CSD 참여위원 및 사무국 실무자 640명
- 조사방법 : 24개 지역 CSD 사무국을 통한 이메일 설문

<그림 4-5> 24개 지역별 설문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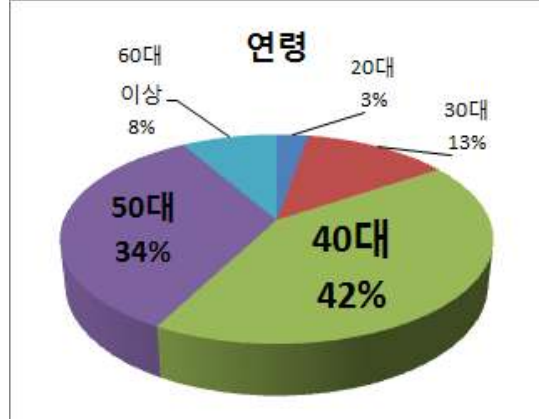


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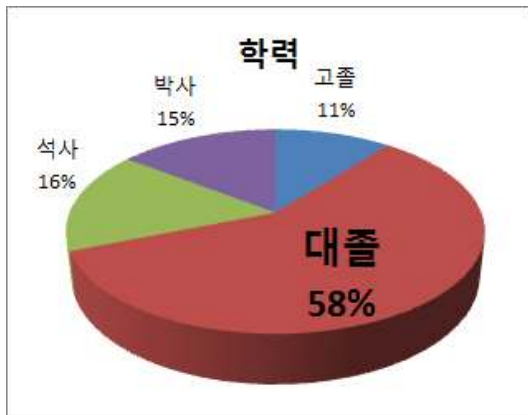
<그림 4-6>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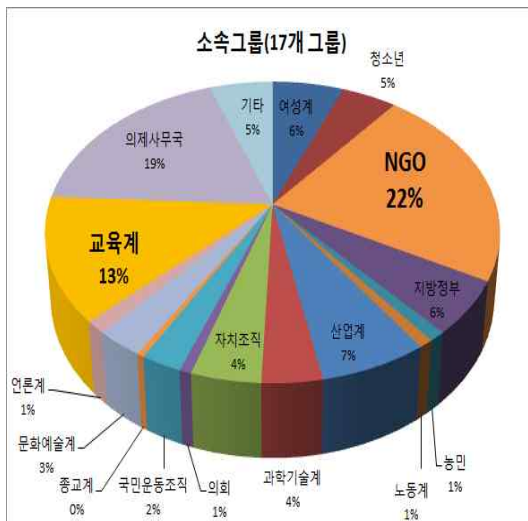
<그림 4-7>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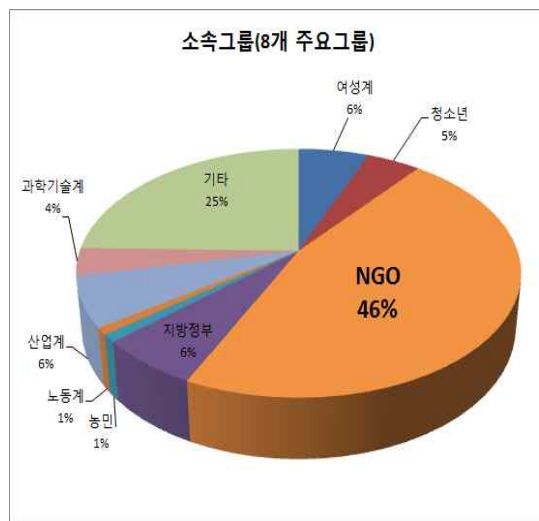
<그림 4-8>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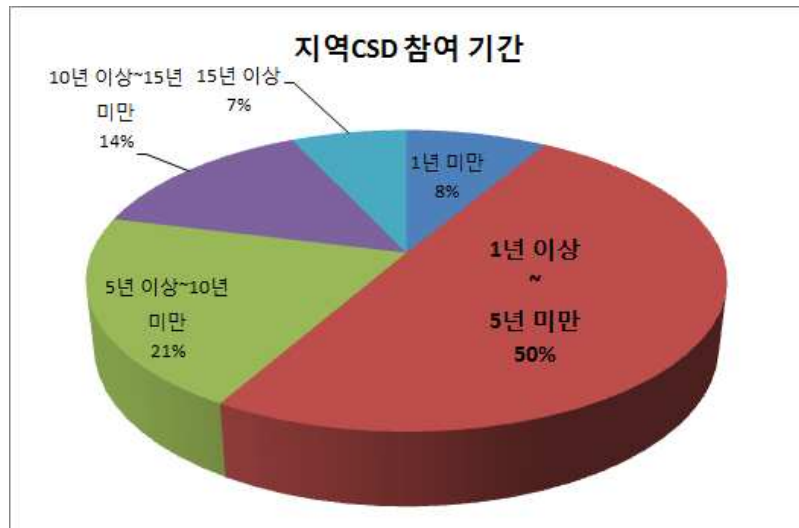
<그림 4-9> 소속그룹(17개 그룹 분류기준)



<그림 4-10> 소속그룹(8개 그룹 분류기준)



<그림 4-11> 의제활동 총 참여기간



• 평균 참여기간 : 5.2년

<응답자 특성 종합>

40대 이상 장년층, 남성, 대졸 이상 고학력자
시민단체 활동가, 교육계 종사자 및 의제사무국 실무자
5년 중단기간 참여자 다수(평균 참여기간 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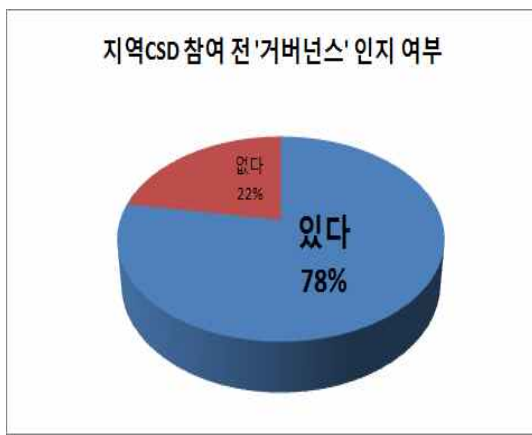
3)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이해 정도

3-1. 지역 CSD 참여 전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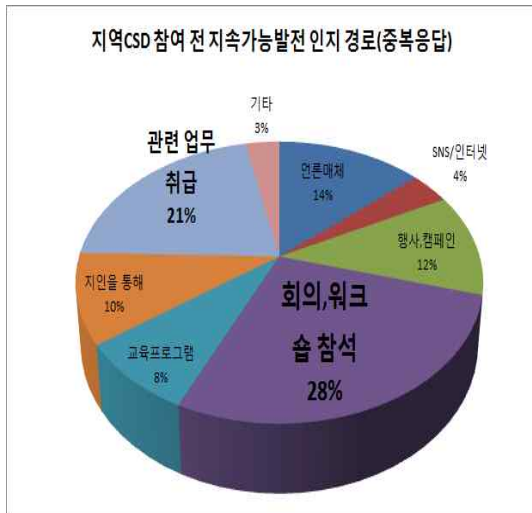
<그림 4-12> 참여 전 '지속가능발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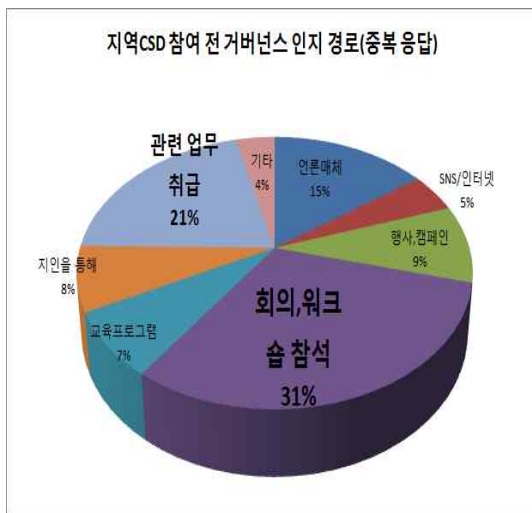
<그림 4-13> 참여 전 '거버넌스' 인지 여부



<그림 4-14> 참여 전 '지속가능발전'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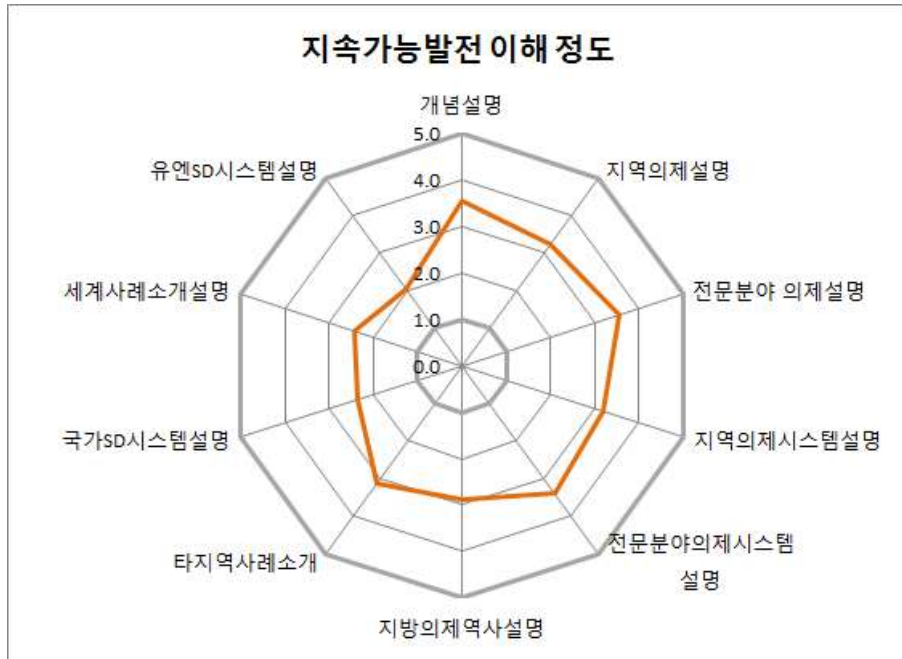


<그림 4-15> 참여 전 '거버넌스'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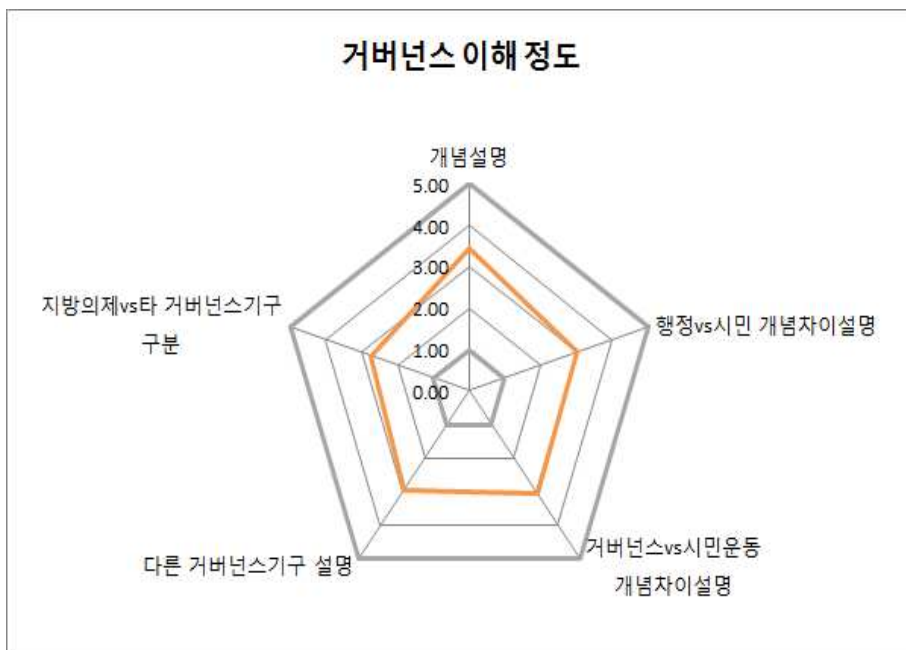


3-2.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림 4-16> '지속가능발전' 이해 정도(5점 만점 기준)



<그림 4-17> '거버넌스' 이해 정도(5점 만점 기준)



3-3. 지역 CSD 참여 후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그림 4-18> 지역CSD 참여 후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인식 변화 정도(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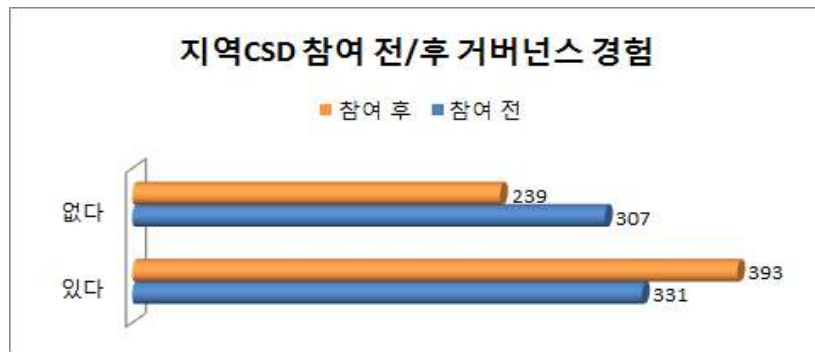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이해 정도 종합>

- 회의나 워크숍 참석, 관련 업무 취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높음.
→ 40대 이상 고학력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의제사무국 실무자 응답자 특성이 반영.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전문분야의제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조금 높은 편이나,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 및 이해도는 낮은 편.
-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개념, 행정 중심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중심 거버넌스의 차이, 시민운동과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나,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들 속에서 지역CSD의 역할과 기능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지역 CSD 참여 활동이 관계자의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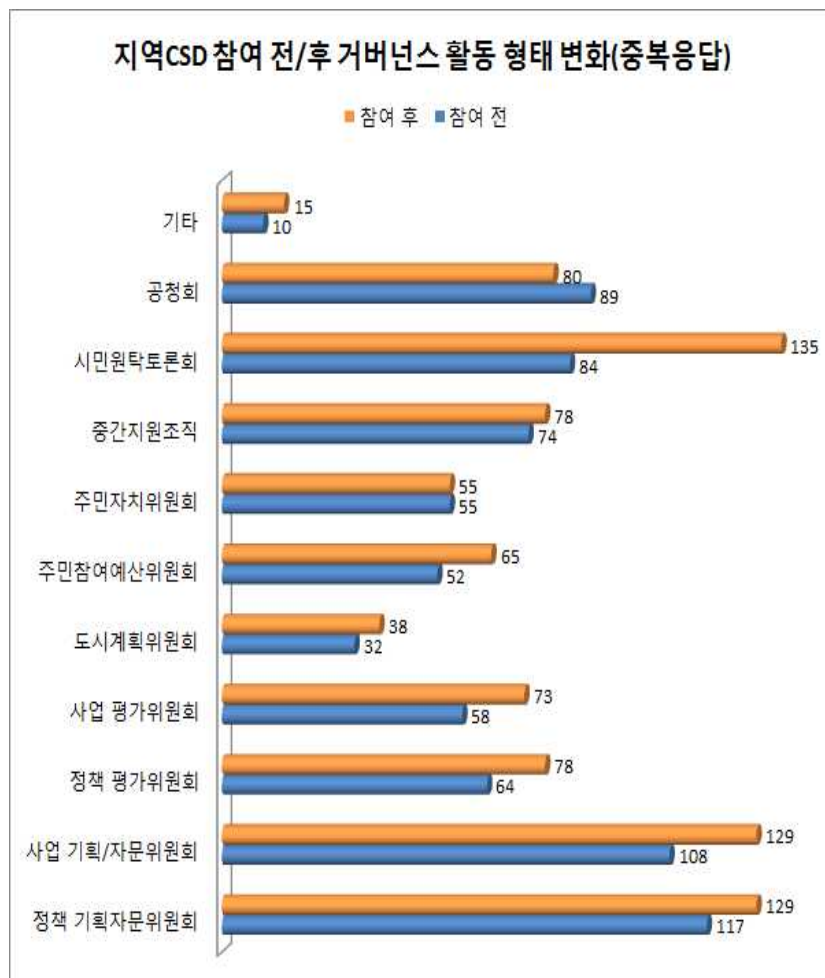
4) 거버넌스 활동 현황

4-1. 지역 CSD 참여 전/후 거버넌스 활동 경험 유무 및 활동 형태 변화

<그림 4-19> 지역 CSD 참여 전/후 거버넌스 경험 변화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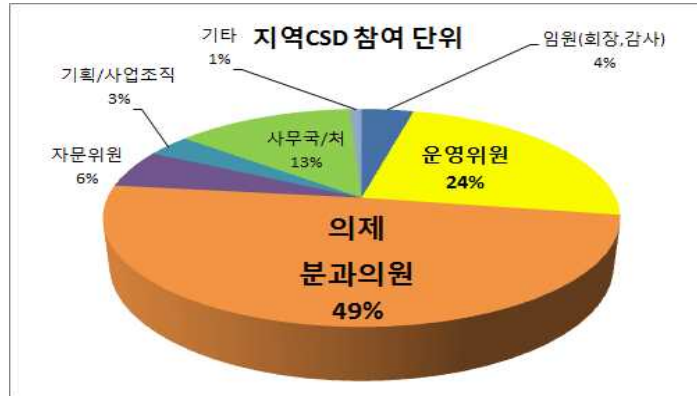


<그림 4-20> 지역 CSD 참여 전/후 거버넌스 활동 형태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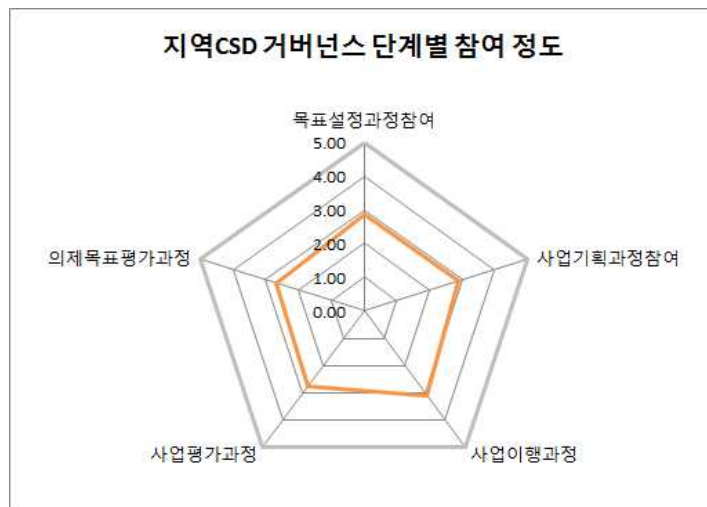


4-2.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단위 및 단계별 참여 정도

<그림 4-21> 지역 CSD 거버넌스 참여 단위



<그림 4-22> 지역 CSD 거버넌스 단계별 참여 정도(5점 만점 기준)



<거버넌스 활동 현황 종합>

- 지역 CSD 참여 이후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경험이 풍부해진 것으로 조사.
→ 40대 이상 고학력의 시민단체 활동가, 의제사무국 실무자 응답자 특성이 반영.
- 지역 CSD 참여 이후, 전반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민원탁토론회를 통한 거버넌스 참여 활동이 증대.
→ 지역 CSD가 참여위원들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확장에 크게 기여.
- 지역 CSD의 목표설정 및 이행단계 거버넌스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사업 및 목표 평가단계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의제 목표 및 실천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나 방법체계 구축이 필요.

4. 종합정리

응답자 특징		
시민단체 활동가 의제사무국 실무자 교육계 종사자	남성 40대 이상 장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자	5년 중단기 참여자 다수 (평균 5.2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이상 고학력의 시민단체 활동가, 의제사무국 실무자, 교육계 등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현장 실천적 관점 내재. • 5년 중단기 참여자가 다수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경험 초기 단계 		

지역 CSD 거버넌스 활동 성과		
높은 '지속가능발전(SD)' 인지도 높은 지역차원의 SD 이해도 낮은 국가 및 국제 SD 이해도 SD 이해 증대 크게 기여	높은 '거버넌스' 인지도 높은 일반적 거버넌스 이해도 낮은 CSD 성격 차이 인식 거버넌스 이해 증대 크게 기여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확대 기여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참여 평가체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CSD 참여자의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場) • 지역 CSD 참여자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기회/통로 제공.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인큐베이터 • 자문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이행 수준의 거버넌스로 진일보. →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 기여 		

V. 결론 : 성과와 과제

1.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특징 및 성과

1)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장 : 비공식 & 비형식 교육

- 24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활동의 29%가 환경, 사회, 경제 분야 교육 활동으로, 비공식 교육 제공의 장.
-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크게 제고되는 등 참여자의 경험적 이해 증대에 기여 → 비형식 교육 기능.

2) 다양한 주체들의 수평적 파트너십의 장 : 민-민, 민-관 파트너십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참여그룹은 NGOs, 지방정부,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전문가)이며, 그 외에 지역 자치조직, 교육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청소년 그룹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의 최대 민관 네트워크의 장.
- 지속가능발전 의제 설정 및 실천 과정을 통해, 민-민간(NGOs-과학기술계, NGOs-기업), 민-관간(NGOs-정부, 과학기술계-정부, 기업-정부)간 파트너십 촉진.

3) 참여 거버넌스 역량 강화의 장

- 정부의 자문위원회 시스템을 통한 자문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에서, 비록, 환경분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목표설정 및 이행 단계 거버넌스로 진일보.
- 또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를 통해 시민원탁토론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부의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 활동 경험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기능.

2.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향후 과제

〈지역 차원 추진 과제〉

1) 사회 및 경제 분야 주체 참여 확대 및 이슈 통합

- 환경 중심 의제 활동에서 사회 및 경제 분야 의제 설정 확대 필요.
 - SDG 1(빈곤)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생계, 노숙자 등
 - SDG 3(건강/의료) : 건강 및 기초 공공의료 서비스
 - SDG 4(교육) : 사회취약계층 교육복지(장애인, 저소득층 등)
 - SDG 5(성평등) : 성폭력 예방, 여성리더십, 성평등 교육의 일반화 등
 - SDG 8(일자리 및 경제성장) :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복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
 - SDG 9(산업혁신) : 사회적 경제,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등
 - SDG 17(파트너십) : 지방재정 확충, 지표 개발,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
- 또한, 도시화율 90%의 지역차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단위로서 도시차원의 의제 개발 필요.
 - UG 2(이주민/난민) : 다문화가정, 세계시민교육 등
 - UG 8(도시계획/디자인) : 인문사회과학적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등
 - UG 9(토지이용) : 공간정의(공간 이용의 형평성-인간vs건물/도로, 사유지vs공유지) 등
 - UG 10(도농연계) : 도시와 근교 지역간 유기적 연계(도시편의서비스-농촌생태환경) 등
 - UG 11(공공공간) : 도심 내 정치사회적 공간(집회, 공동체 문화활동 등), 녹지공간 등
 - UG 14(비공식 경제) : 노점상 등 제도화되지 않은 저소득층 생계활동 영역 등
 - UG 19(교통) : 대중교통 인프라(도로, 이동수단, 교통시스템 등), 생태교통 등
 - UG 22(비공식 주거) : 쪽방, 달방, 고시촌 등 불법/위법 주거문제 등
- 관련 분야 주요그룹의 지역CSD 참여 촉진 및 필요할 경우, 사업을 통한 풀뿌리 인적자원 육성.

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대상 사업 확대 : 지방정부 세출예산의 1%

- 2015년 24개 지역 CSD 예산 기준, 담당부처 세출예산 총액의 평균 0.22%, 지방정부 세출예산 총액의 평균 0.014%에 불과하여, 사실상 다양한 의제를 이행하는데 재정적 한계 발생.
- 지역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대상 사업’을 선정, 지방정부가 지역 CSD와 함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공동사업 추진(기획자문, 사업위탁 등) 사례가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과제’와 연계되지 않는 등 지역 CSD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반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다수.

- 지역 CSD를 통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사업의 총 규모가 지방정부 세출 예산의 최소 1% 달성되도록 정책목표로 수립할 필요.
- 또한, 각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대상 사업 선정을 통해, 참여가 부족한 경제, 사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지속가능발전 행정담당체계 전환 : 환경부서 → 시정 총괄부서

- 조사지역의 87.5%가 환경부서 행정담당체계로 인해 사회 및 경제 분야 의제 설정 및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
- 사회 및 경제 분야 이슈 및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환경부서 행정담당체계를 시정총괄부서로 전환할 필요.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종합적 특성과 과거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례를 고려할 때,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직적 위상 전환을 고려할 필요.

4) 국제 이행목표 연계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수립

- 지속가능발전의 지역 이행기구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 이행목표와 연계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목표’ 재작성 또는 수립 필요.

5)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현재, 광역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적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목표, 이행계획, 평가지표 및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편.
 - 2014년부터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도 ‘거버넌스’ 지표는 부재
- 지방정부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마련이 중요.
 - ‘참여적 거버넌스’의 주요 평가 내용 : ‘정부의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참여 거버넌스 제도의 운영(양적, 질적)’,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변화(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
 - 지역 CSD를 통한 정기적인 참여 거버넌스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6)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 성별, 연령별 데이터 및 사업내용의 수치화

- 24개 지역 CSD의 2011~2015년 총회자료집 분석 결과, 참여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등 기본 데이터 분류 부재로 다양한 분석결과 도출 곤란. 특히, 성별 데이터 구축은 성평등 정책 상 기본 의무임에도 누락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사업내용의 수치화를 통한 사업성과의 명료화 및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성 달성 기여도

체계화 부족.

-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지역 CSD의 기본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부 정책 자료 및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확보 필요.

7) 지역 내 시민사회 활동사례 온라인 정보망 구축 : 시민사회 온라인 사전(엔지오피디아)

-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활동의 온라인 정보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활동은 문서화부터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까지 미흡하거나 산재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유의미한 활동들이 가시적으로나 종합적으로 인지,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
- 때문에 지역 지속가능성 평가 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량과 성과들이 누락되거나 도외시되어, 지역 지속가능성의 한 축인 '참여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역량 평가 및 정책 마련이 곤란.
- 지역사회의 '참여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지역 내 모든 시민사회 활동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 활동사례 온라인 정보망 구축'(시민사회 온라인 사전) 필요.
→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기본 구성을 갖춘 사전 형식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작성가능하고, 검색어 검색만으로 시민사회 활동내용이 나오도록 하여 일반대중의 정보접근성 제고

<범 국가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치정책적 연대협력 과제>

1) 국가의 지역차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견인을 위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검토보고서' 작성

- 지역별 지역CSD의 이행현황을 종합하여 국가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연계 분석한 정책 검토보고서 발간 필요.
-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성과를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 견인 필요.

2) 상향식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연대협력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2016.1.12. 발표)의 수립 과정(2015.4.~12.)에서 지역 CSD의 의견수렴 없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4대 목표 및 50개 이행과제'가 수립, 발표.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2016. 4월~7월 경 유엔차원의 SDGs 국가별 이행체계 합의 후, 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이행체계 결정 예정.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례와 현재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역 CSD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내 이행체계 구축 논의 과정에 지역 CSD의 목소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
-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CSD의 대정부 정치적 대응 역

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 담당부처(환경부), 국회(SDGs 국회포럼), 시민사회(KoFID, 한국환경회의 등)와의 정책적 교류·협력 강화 필요.

3) 지방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그룹과의 연대협력

-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제도의 강화는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논의 그룹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도모.
- 또한, 지방자치분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교류·협력 필요.

4) 세계 지속가능발전 운동 촉진 및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 한국의 지역 CSD와 같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사례로, ① 시민사회의 동력으로 ② 풀뿌리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③ 지역사회(지방정부+시민사회)의 역량을 기반으로 ④ 약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세계 지속가능발전 운동 측면에서 의미.
-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은 ‘지속가능발전’이 마침내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신호로써,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년 보다 활발히 확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국제흐름 속에서, 지난 20년의 한국의 지역 CSD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운동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운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필요.
 - 유엔기구 : UN ECOSOC(총괄), UN Habitat(도시), UNEP(환경), UNDP(개발), UNESCO(교육) 등
 - 지방정부 : 이클레이, 시티넷, 휴먼도시네트워크, 진보도시네트워크 등
 - 시민사회 : 전환마을네트워크, 생태마을네트워크
- 국제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 지속가능발전 현황보고서(영문)’를 작성하여 유엔기구(UN ECOSOC)에 제출하고, 세계도시포럼 등 주요 국제회의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책 촉진을 견인할 필요.

[부록 | 설문조사지]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제작>을 위한
지방의제21 위원 및 실무자 인식도 및 거버넌스 참여 현황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이하 SD센터)는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등 지속가능발전 국제흐름에 대응하여, 전국 24개 광역시도 및 기초의제추진기구와 함께 2015년 7월~12월까지 5개월동안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위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5.9.22~10.30까지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역량과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는 2015년 12월 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및 각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9.21.

- 조사기관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설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02-706-6179 e-mail : kicdsd@kicdsd.re.kr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 보고서)으로 정의.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

◆ **거버넌스(Governance)**: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되며,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

◆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공공기관(정부 등)의 개혁을 위한 개념으로, 참여, 투명성, 효율성, 대응성, 책무성, 합의 지향, 형평성 및 포괄성, 법의 지배 등 8가지 원칙이 주요 특징.

◆ **민주적 거버넌스**: 정부의 효율성을 증시하는 '좋은 거버넌스'에 비해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2015년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2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총회차원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채택되어
‘지속가능발전’ 이 마침내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주류 패러다임이 된 의미있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용은 세계적으로 가히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국가주도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정치적 영향으로 지속되지 못한 많은 세계 사례에 비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주도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제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동을 추진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때이다...”



※ 본 보고서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www.kicsd.re.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